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통일연구원

제1회의 **독일 통일 20년: 성과와 시사점**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정치적 측면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경제·사회적 측면
Walter Klitz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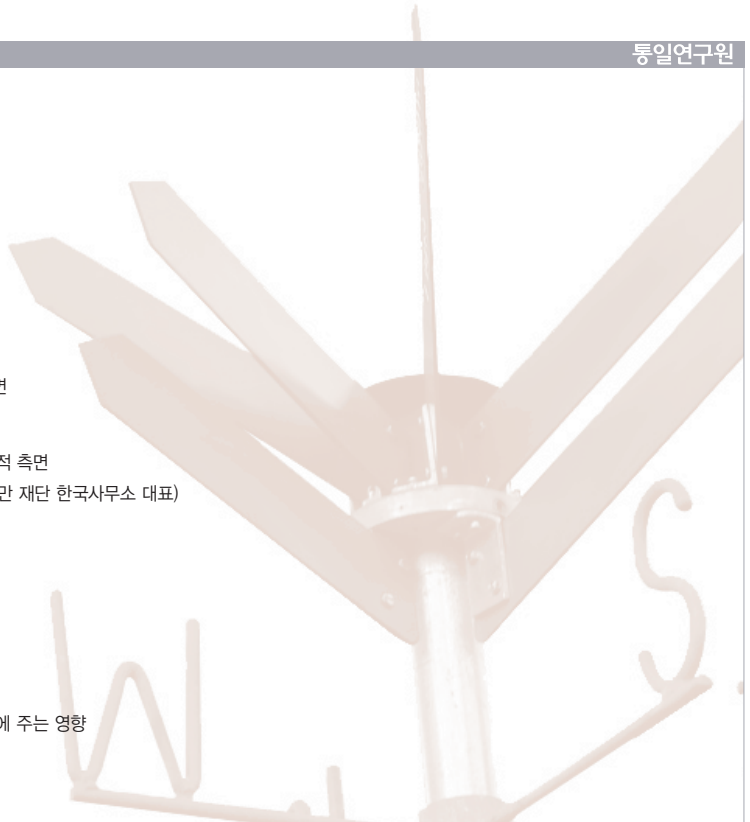
토론

제2회의 **한반도 통일비전**

한반도 통일의 의미 및 전망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통일연구원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인 쇄 2010년 6월

발 행 2010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T. 070-7090-1177)

인 쇄 처 (주)늘품플러스

ISBN 978-89-8479-549-5 93340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30 개 회 식

개 회 사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축 사 엄종식 통일부 차관

기조연설 박 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제1 회의 | 독일 통일 20년: 성과와 시사점

사회 : 길정우 前 중앙대일리 발행인

14:30~16:00 발 표 1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정치적 측면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발 표 2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경제·사회적 측면

Walter Klitz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토 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정용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Uwe Wissenbach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사

16:00~16:30 휴 식

제2 회의 한반도 통일비전

사회 :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 | | | |
|-------------|--------------|--|
| 16:30~18:00 | 발 표 1 | 한반도 통일의 의의 및 전망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발 표 2 |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토 론 | 김호섭 중앙대학교 교수
박승준 인천대학교 교수
안인해 고려대학교 교수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개회사

저희 통일연구원이 개원 19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원을 기념하는 오늘의 뜻 깊은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연설을 해 주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님, ‘독일 통일의 성과’라는 소중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님,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Walter Klitz 한국사무소 대표님의 관심과 배려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국제학술회의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 학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통일연구원은 1991년 4월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및 통일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적실성 있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남북한 통합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며, 국가의 통일대계를 세우는 연구에 진력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저희 통일연구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언을 잊지 않으시는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성원이 큰 도움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연구원의 정책 대안들을 통일·북한문제의 현장에서 실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는 정책입안자들의 애정과 질책은 저희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제학술회의는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개최됩니다. 통일 독일이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성찰하고, 우리도 통일의 비전을 찾아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사명감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독일은 통일 직후, 막대한 통일 비용과 동서독 사회통합 문제 등 통일 후유증을 심하게 겪었지만,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독일은 유럽연합의 중추국가, 세계경제규모 4위의 위업을 달성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통일 이후, 유럽 대륙은 유럽연합으로 통합되어, 그동안의 갈등과 전쟁의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고 평화를 정착하고 번영을 이루어 내는 새로운 세기를 열었습니다.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정세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상생을 위한 협력보다는 북핵이라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데 진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고 한반도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된 독일의 눈부신 발전 현장에서 통일이 주는 성과를 직접 경험한 독일 및 유럽 관계자님들과 통일 전문가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독일 통일은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통일 비용에 허덕이게 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통일은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 편익을 고루 누리고,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있어, 이전보다 더 큰 발전의 동력을 얻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독일 통일의 생동한 경험이 한반도 통일의 비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학술회의뿐만 아니라, 개원 19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통일연구원이 명실상부한 ‘북한·통일’ 문제 연구의 선진 ‘Think-Tank’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통일연구원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현직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개원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의 개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8일

통일연구원 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차관 엄종식입니다. 봄의 따스함과 함께 긴 겨울의 여운이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는 4월의 길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통일연구원 개원 19주년 기념학술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시에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한반도 미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고 기조연설을 준비해 주신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님, 발터 클리츠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해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비전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독일이 통일을 이룬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냉전의 해체와 함께 갑작스레 찾아왔던 통일의 역사적 무게를 극복하고, EU 통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가 무력충돌 없이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



독 시민들의 자유화 행진은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어졌으며, 독일인들은 그 역사적 행진을 통일로 이어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서독은 강력한 경제력과 치밀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독일 통일에 소극적이던 주변국들을 설득해 냈으며, 역사가 부여한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이렇듯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통일은 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사적 의의와 함께, 20세기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가 세계사의 큰 흐름에 동참하는 문명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화된 민주복지국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우리의 통일미래 비전을 자신 있게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당면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비핵화 의지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통일 여정에서 지치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 의

식을 갖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 통일미래를 모색하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통일연구원 개원 19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8일

통일부 차관 **엄 중 식**



기조연설

20년 전,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은 통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우리 한국인은 독일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후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이 보여줬던 진정한 내적 통합 노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 정세는 화폐개혁 후유증과 식량난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하며, 정치적으로도 후계구도 문제 등으로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비전’ 학술회의 개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는 해에 통일 독일이 이룬 성과를 점검해 보고, 그것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통일연구원 개원 19주년 기념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독재가 70여 년 이상 계속된 결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체제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10일 구소련 당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체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실용주의 개혁정책 즉,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부터 헝가리와 폴란드는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로의 체제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동독은 동유럽의 체제 변화 물결에 편승하지 못하였으며 개혁을 거부하여 동독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몸으로 밀어 무너뜨렸

습니다. 그 결과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게 되었고, 이는 동구권 공산주의체제 붕괴로 이어져 탈냉전 시대로 돌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럽의 정치 지형도 탈바꿈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통일]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독일이 통일을 통해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봐야 합니다. 독일은 통일을 통해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통일 독일은 유엔안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국제무대에서 큰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 독일은 평화 유지를 위해 자국 군대를 당당하게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통일 독일은 세계 4대 강국이며, 유럽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통일 독일이 동독 지역에 엄청난 재정적 수혈을 했음에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했으며, 최근 5년간 세계 제1위의 수출 국가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치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독은 통일 과정에서 천문화적인 재정적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동서독 마르크화 간 1:1 등가 교환으로 인해 서독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통일 독일은 통일 이후 지금까지 무려 1조 2천5백억 유로(약 2,000조 원 이상) 상당의 자금을 동독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쏟아 부었습니다. 동독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충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1월 독일을 방문하여 만난 노버트 램머트(Lammert) 연방 하원의장은 동독 지역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데 대한 서독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동서독 간 격차에 대한 동독 지역 주민들의 불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통일 독일의 사회·문화적 통합에는 시간이 아직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이 지난 오늘날, 통일의 부담과 갈등, 그리고 통일 후유증을 점차 성공적으로 해소해 가며 더욱 강력한 독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에 독일 통일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으며, 전쟁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독일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은 남북통일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꾸준한 교류와 협력 추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정보 유입, 국제공조, 북한의 내부 변화, 자유를 선택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와 통일의 기회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서독 관계는 분단 이후부터 통일이 되는 날까지 양과 질의 변동은 있었으나,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독은 독일 통일 20년 전부터 동독이 인적 교류 등에 동참할 경우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동독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매년 20억 달러에 달하는 서독의 돈이 동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결과 독일 통일 직전 동독의 국민소득은 1인당 1만 달러로 서독의 1/3수준까지 올라섰고,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는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에는 인적 교류가 순조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동서독 간에는 통일 이전에 7차례에 걸친 공식적 정상회담과 6차례의 비공식 정상 간 만남이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냉랭함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남북 교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성립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인적·물적·사회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서독은 동독에 대해 국제법적으로는 국가(State)이지만, 외국(Ausland)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식 국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 했던 특수 외교 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한도 상호 간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여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 설치를 추진한 뒤, 경제협력 진전 상황에 따라 이를 당국 간 연락과 체류자 보호 등 영사 기능을 담당하는 상주대표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카우프는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 분단의 고통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동독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서독 교회 주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자 서독 교회는 이에 따른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독 교회는 동독정치범 석방, 교계인사 석방, 이산가족 재결합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 중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추진됐던 제한적 이산상봉 행사에 몇 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는 역류가 확인된 900여 명의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송환을 조건으로 물품 또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하되, 독일 교회의 역할을 대한적십자사와 종교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맡아준다면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합니다. 현재 북한 주민 상당수의 의사가 북한 정권의 정보 차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의 현실도 가감 없이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남한의 현실이 바로 알려지게 되고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중요성, 북한체제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북한 주민의 판단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북한 주민의 의사가 빠른 시간 내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독 붕괴는 서독 TV가 동독의 전 지역에서 방송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베를린 장벽을 두고 둘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저녁 8시가 넘으면 동서독이 통일된다고 할 정도로, 동독 주민들은 서독 TV를 시청하며 공감대를 키워 왔습니다. 특히 동독 주민들은 서독 TV 프로그램 중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치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실상을 보고 느끼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판단력을 갖게 되어 통일을 선택하기 위한 사상적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통일외교도 전개되어야 합니다. 독일 통일은 독일인

들이 원한다고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국, 소련 등 주변국과 어떠한 외교를 펼쳤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측면에서 독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미국과 소련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전기는 1989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폴타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서방 국가들(NATO), 소련은 동구 국가들(바르샤바조약)과 통일 독일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가능성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미국과 서독의 외교적 노력과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의 뜨거운 열망이 소련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한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의 우려가 1990년 1월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나, 1월 말부터 영국, 프랑스도 독일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일도 우방국인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납득시키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지혜로운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승전 4개국에 의한 점령국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동의 없이 통일을 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에게는 통일을 위한 2+4 회담이 필요했습니다. 1990년 9월 12일 서독과 동독 그리고 대독 승전 4개국 외상이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였고, 독일 분단의 전후 처리가 종결되어 독일은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4강 외교뿐만 아니라 한·EU 정상회담, 한·ASEAN 정상회담, APEC 및 ASEAN+3 회의,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다자 외교 무대



에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이상 우리 안보와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의 근간으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미동맹은 지역·국제적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국 외교 강화가 필요하며 한중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중관계는 1992년 한중 정식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양국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공감대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 및 인적 교류는 물론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인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경제, 통상,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긴밀한 한중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한마디로 ‘평양 가는 길에 베이징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경제 회복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만드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전략 전문기고가인 로버트 카플란은 “When North Korea Falls”(Atlantic Monthly, October 2006)라는 논문에서 북한이 붕괴하면 최후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플란은 북한의 붕괴가 장기간에 걸쳐 (1) 자원 고갈, (2) 인프라 유지 불가, (3) 지역 군벌 발호, (4) 진압, (5) 군벌의 저항, (6) 정권 분열, (7) 신지도부

구성 등 7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북한이 1990년 중반 4단계에 진입했던 바 있으나, 미국의 식량 원조 및 한국과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3단계로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붕괴한 이후의 상황을 예상해 보면, 초기 안정화 책임은 미군이 질 것이나, 추후 한·미·중·러 4개국 병력이 북한에 공동 개입할 것이며, 중국은 두만강 유역의 경제권 장악 등 통제력을 확대해 나가고 러시아도 영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중의 반대로 병력을 투입하지 못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중국 중심의 아시아 번영 구상의 핵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큰 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최후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카플란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남북통일은 불가능해 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인 대책과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평화통일의 주체는 한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생과 공영 정책으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급변사태 대비를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전략적 대화의 창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또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통일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철히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꺼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서



독 정부의 지원은 동독 주민들의 서독 사회에 대한 적응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8,000여 명의 탈북자가 들어왔으며, 올해 안에 탈북자 누적 인원이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국내 적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 중 약 50% 정도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75% 가량이 단기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성공적 국내 적응과 그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포용 여부는 향후 남북사회통합의 성과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이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인 이유입니다. 또한 탈북자들이 이념과 체제, 문화적 이질성을 뛰어 넘어 잘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작은 통일의 시작’이며, 탈북자들이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다음 통일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독일 통일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으며 이는 한국에게도 의미있는 교훈을 줍니다.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된 후 몇 년이 지나 헬무트 콜 前총리와 헬무트 슈미트 前총리가 서울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남북한 통일의 창문이 열리면, 그 기회를 잡아라”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기회의 창문이 열렸을 때 두 번 생각하라(think twice)”라고 조언했습니다. 헬무트 콜, 헬무트 슈미트 총리 두 분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때 이후에 전개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2월 8일 방한한 호르스트 쾰러(Horst Koehler) 독일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통일이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면서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는 독일 통일이 한국에게 주는 가장 결정적인 교훈입니다.

물론 독일 통일 과정과 남북한이 경험할 수 있는 통일 전개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인명 희생을 초래했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남북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통일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상황 여하에 따라 남북한 통일의 ‘기회의 창문’은 예기치 않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한 통일 문제는 이상론보다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한 간에는 상생과 공영의 틀 속에서 꾸준한 대화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때 통일 이후에 전개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가 상호 공존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북한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대북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햇볕정책은 서독의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과 달리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과의 교류와 협력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결단, 정부의 리더십, 한미동맹관계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 UN 등과의 국제공조 등 입체적인 전략과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통일연구원은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곳, 남북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곳, 통일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통일연구원의 건승을 기원하며 개원 19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박진**

목 차

개 회 사
축 사
기조연설

제 1 회의

One Germany in an undivided Europe: The geopolitical accomplishments of reunified Germany	3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경제·사회적 측면	15
Walter Klitz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제 1 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29

제 2 회의

한반도 통일의 의의 및 전망: 통일코리아 모색	41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	83
김 국 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2 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103
•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7

제1회의

One Germany in an undivided Europe:
The geopolitical accomplishments of reunified Germany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경제·사회적 측면
Walter Klitz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제1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One Germany in an undivided Europe:
The geopolitical accomplishments of
reunified Germany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Ladies and Gentlemen,

Quite often people apply a biased approach when evaluat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German reunification. The problem in my opinion is two-folded: on the one hand there is a dimension bias and on the other hand a time bias. By dimension bias, I am referring to the narrow perspective applied, which mainly focuses on the national level and especially on the financial transfers. And by time bias, I am referring to the exuberant expectations in the very beginning after the reunification and the assumptions, partly nurtured by Helmut Kohls dictum of the “flowering regions”, which implied that the social and economic convergence is just a matter of some years.

Well, because of these biases the magnitude of the reunification and its consequences are sometimes not conceived fully, and therefore the accomplishments of reunited Germany are heavily underestimated, on the international as well as on the domestic level.

Therefore I think it is useful to try to bring back to mind some of the circumstances and challenges of the reunification as well as to try to assess the progress made in East Germany.

When the old world order collapsed, Germany not only had to master a new domestic situation but it also had to adapt a new role in its foreign policy. To comprehend the reunification and the following events, one has to look back at least until the 1970s to the **OSZE meeting in Helsinki (1975)**, when the West decided to opt for a strategy of dialogue and cooperation, detente and disarmament. Back then, often underestimated, the OSZE conference and its accords, basically a simple barter deal, which offered the East the recognition of its borders and stronger economic exchange with the West, and in return small concessions with regards to human rights, triggered a general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Communist bloc and the West.

Later, in the beginning of the 1980s, a liberalization process in important Soviet bloc countries accelerated due to civic initiatives in Poland with Solidarnosc/ Solidarity in 1980, in Hungary, as well as in Czechoslovakia with the Charter 77. It peak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when Gorbatschow introduced Perestroika and Glasnost, which in turn led to other important movements in several autonomous republics of the Soviet Union. Another important incident in this series of events was the withdrawal of the Red Army in Afghanistan, which tagged the final failure of the Soviet Union like no other event.

Soon afterwards, a massive movement of GDR refugees tried to force their emigration by entering West German embassies in East-Berlin, Warsaw, Praha, and Budapest. A change of leadership in the GDR and growing protests on the streets finally led to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the end of 1989, which meant the final economic and political bankruptcy of the Soviet Union and the Warsaw Pact. And history progressed further. In the year of the **German reunification**, several new, sovereign states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were founded, and created a completely new political landscape. As a result of all these events, Germany founded itself almost overnight at the center of world politics. The reunification meant a significant strengthening of Germany's economic and particularly its political position in Europe. And because of that, it was very soon challenged to undertake more tasks and responsibilit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Reunited Germany had quickly entered a new era in its foreign policy.

As the EU member state with the largest population and the biggest economy, reunited Germany has become the heart of the European Union, in economical as well as political terms. From then on it has been one of the main drivers behind the European expansion and integration process. Obviously one of the great achievement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as been the **creation of a single market** in Europ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which made the Eurozon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the Euro by far the second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reserve currency. Already today it makes up more than 27% of all international foreign currency reserves, and is expected to reach the 30% level within the next years. The EURO even could become the number one reserve currency in the world, depending on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USA, Europe and Asia, and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recent financial crisis. Considering the last 20 years and the overcoming of all these structural changes, I am confident that the current problems for the EURO are marginal in their scale and will be mastered.

Maybe the biggest achievements of all was the **Eastward expansion of the EU as well as of NATO**, which in consequence meant nothing less but the pacification of West and Eastern Europe, and the final surmounting of the division of Europe. In both cases Germany was probably the most decisive actor. Both cases illustrate very well the drastic changes that took place in Europe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 country like Poland which had been an enemy and a possible military opponent in the case of war became an ally only within a few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Not only during the Eastward expansion did Germany play a decisive role for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but throughout the whole integration process Germany has been playing a crucial role in unifying Europe by serving as a hub and connecting East and West. Hamburg for example recovered the eastern portion of its hinterland, and has become the fastest-growing port in Europe, due to its function as an integrative harbour for the Czech Republic and many other Middle-Eastern European countries. Frankfurt is another good example. The

Frankfurt airport serves the most international destinations in the world and has become the busiest airport in Europe for cargo traffic and therefore also functions as one of the main European transportation hubs.

Overall, after the Eastward enlargement, reunited Germany has successfully transformed into the central transportation and traffic hub in Europe, helping to stabilize and deepe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It is no surprise that in each of these new markets Germany is the largest foreign trading partner. Usually the German industry is also the most important investor in this region. In total, a good ten percent of all exports go to these countries. At the same time, Germany bears the consequences of the European Union in a particular way. It cannot protect its market in the East of the country from competition from EU partners. Germany carries a large part of the infrastructural burden of the new open borders because the major European transportation axes run through the country. Furthermore, in line with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Germany provides some 20 percent of the EU budget.

Another challenge after reunification were the relations with Russia. Throughout the whol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after reunification, Germany had to redefine and balance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which was particularly in the 90s more or less in a state of steady crisis, and obviously uneasy about losing all its former allies to NATO. Germany proved to be a crucial partner for Russia's transformation process in the 1990s and by pressing to integrate Russia in the G8, establish the NATO-Russia Permanent Joint Council and later the NATO-Russia Council, Germany could help integrate Russia and balance its relations with Russia.

Related to that, stabilizing the periphery of the former Soviet Union has been another major task for Germany's foreign policy. Due to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have not only been confronted with almost 80 ethnic conflicts in its periphery, but also with the formation of 15 new sovereign nation states, mainly located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From the start no other country has shown more political presence in these regions than Germany. It is no surprise that within the European Union, Germany is the biggest donating country to Central Asia. Immediately after the independence, the then foreign minister, Hans-Dietrich Genscher, dispatched ambassadors in all Central Asian countries to promote and support stability, rule of law and free market economy. It is complemented by a vast network of cultural, academic and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the Goethe Foundation or the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Shortly after reunification, Germany had to master the return of **military conflicts in Europe**, the collapse of the multiethnic state of the Republic of Yugoslavia in 1991, another direct consequenc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Empire. Even though Germany was still occupied with handling its reunification, it was increasingly ask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gage and assume responsibility. This was particularly difficul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German forces had not even started their transformation from a territorial army to a flexible deployment force. On the contrary, throughout the early 1990s reunited Germany was still occupied with joining two forces. Already in 1993, Germany had to send troops to Somalia for humanitarian assignments on a UN mission. But the major turning point occurred in 1996, when the German parliament decided to send more than 3,000 forces to Bosnia within the framework of SFOR to secure the peace process. From then on Germany engaged in many peace-

building and peacekeeping missions and sent more than 10,000 troops to Kosovo, Congo or Afghanistan, which are all exemplifying the massive change of the scope and practice of Germany'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r, as the then defense minister Peter Struck once coined it in a now proverbial sentence: these days Germany's security is also at stake at the Hindu Kush.

Reunification also brought along **further costs and problems of integration** which are quite often forgotten, but nonetheless had to be mastered by reunited Germany, like the repatriation of almost 550,000 Soviet troops, which alone cost more than 10 billion Euros. There was furthermore the integration of more than 1 million so called Russlanddeutsche (ethnic Germans living in Russia). As a consequence of the wars in former Yugoslavia, Germany had to absorb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Already the number of refugees from Bosnia amounted to 245,000 in 1994.

So far, I have mainly talked about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of the reunification and its geopolitical consequences for reunited Germany and its achievements.

But what did we achieve on the national level in reunited Germany?

In order to evaluate the progress which has been made until now, it is absolutely crucial to look back and remind ourselves from where Germany started. The task of uniting two communities of such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levels naturally implies severe problems,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which I tried to outline above.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he GDR's economic system was on the verge of collapse. The East German economy faced an overwhelming

heap of problems. The industry was in decline, the environment devastated. Due to a significant technological gap, the productivity per capita in the former GDR in 1988 was only 20 to 25% of that in West Germany. Furthermore, after decades of central planned economy incentives for workers and managers were completely distorted, wages and prices did not reflect scarcities and there was basically a complete absence of entrepreneurship. Obviously huge investments from West Germany were necessary to achieve comparable social and economic levels. Quite often though it is forgotten that these investments are not just costs. Especially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environment, science need time until they yield a return. It surely took some time, but today we can see the flowering regions Helmut Kohl was talking about in 1990. I think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reunification and the targeted convergence really is something which needs time and commitment. It is nothing that can be simply planned and achieved on a short-term basis. One fundamental lesson of the German reunification is that it took almost 15 years of work and stable commitment until we had visible success in terms of convergence.

It is true even today: we have not yet reached a full convergence in social and economic terms. Nonetheles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towards a full convergence is under way.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East Germany as a whole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new growth engine. As unit labour costs are lower than the West German average and almost only cutting-edge technology is used, standards in this particular sector are almost on a par with those in the old federal states. East German productivity has been constantly rising, and is today close to 82% compared to Western levels and the economic structure is more and more adjusting to the one of West Germany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hare of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which is particularly crucial to finance the growing industries in the

East. There is still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one looks at the GDP per capita data overall, but when comparing the East German federal states in a more realistic way with their Western “peer group”, meaning lander of similar structure, they already attain up to 85% of the GDP per capita of their western counterparts.

Furthermore, East Germany has increased and stabilized its attractiveness to foreign investors as one of the most competitive production sites. It developed an enormous potential in **key future industries**, not only in the area of renewable energies but also in other High-Tech areas such as medical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nano-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biotechnology and so on. Almost unnoticed until recently, a small but efficient industrial sector has developed in various High-Tech centers, so-called beacon regions in the five new federal states. The future growth potential in this region is therefore very promising since most of these new High-Tech companies have not even begun to take off yet. Clusters have successfully been created in innovative industries like the optical and electronic industry in Jena or the chemical industry in Saxony-Anhalt. There are several top-notch networks where industry closely works together with highly prestigious and worldwide-known research institutions. An excellent example is Thuringia and the solar industry in and around Erfurt. The ties to the reg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Ilmenau are close, as well as the links between several leading research institutes like the Fraunhofer Institute and world market leaders such as Bosch Solar Energy. The photovoltaic industry in Thuringia already produces every sixth solar cell worldwide.

Reunited Germany also managed to bring about a change in many other fields. The economic problems went along with an outdated **infrastructure** and massive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reckless

production methods. Today, East Germany's infrastructure is modern, the road net is state of the art as well as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damages to the **environment** are removed to a large extent. Before the reunification, East Germany had the highest per capita sulfur-dioxid and dust emissions Europe-wide and Saxony-Anhalt emitted even more sulfur-dioxid and dust in 1989 than West Germany as a whole. Today, it is only 0.5% of the emissions of the former GDR.

The same success story go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were reduced by more than half, thanks to massive investment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energy sector, the conversion to environment-friendly sources of energy and a drastic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as well as the refurbishment of the waste industry. Major achievements could also be made in the deployment of dangerous waste accumulated over the years due to brown coal mining, not to forget the successful water purification.

You see that in the years following unification there appeared a large number of reasons to invest in East Germany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still, a lot has to be done until full social and economic convergence will be accomplished. But on the whole, after 20 years, in domestic as well as geopolitical terms, the unification presents itself as a success story for Germany and Europe. Its impact had a manifold impact on the continent: the democratization of Europe, the final unity of Europe, the deepe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an overall improved security situation.

What could be relevant for Korea nowadays?

The Cold War ended in Europe 20 years ago, but it still lingers on in Asia. Divided Kore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ack of a

peace treaty between Japan and Russia and the China/Taiwan conflict make Northeast Asia one of the sources of global insecurity. Certainly, there are cruci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ses and Korea has to find its own way to reunify. But nonetheless I think there are some general lessons to draw from the German experience.

The most important, as I tried to emphasize in the first part, is to fully comprehend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this event and the unpredictable course history can take. In Germany nobody really believed in the unification as a serious option to appear on the agenda so quickly and unexpectedly. The same could happen here in Korea as well. Especially these days, there is enough reason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the domestic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slowly but steadily worsening. Therefore South Korea has good chances to be faced with a sudden challenge of unification. Even though no prediction or plan will be implemented one-on-one, the Korean government is nevertheless in a position to develop strategies for the future and to bring to mind not only the domestic but also the regional and global consequences of a united Korea. Therefore it will be essential for Korea to keep and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USA, China and Japan, since a successful unification will only be possible in coordination with these important regional powers.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경제·사회적 측면

Walter Klitz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I. 독일 통일의 사회·경제적 성과

독일 통일이 달성된 후 20년이 지나서 자유를 기치로 내건 독일 재단의 대표에게 누군가 통일의 성과를 묻는다면, 그는 주저 없이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적할 것이고, 이를 통해 1989년 가을에 거리로 나온 동독 주민들이 가졌던 저 갈망을 그대로 표현할 것이다. 1989년 평화혁명의 원동력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 의사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로의, 그리고 삶을 자발적으로 꾸릴 수 있는 자유로의 부름이었다.

우선 본 주제인 독일 통일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다루고 싶었다. 여기서 나는 몇 가지 소수의 측면만을 다룰 수밖에 없으며, 주축 측이 요구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 걸맞게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려 노력할 것이다. 보통 독일 사람들은 메달의 좋은 면만을 관찰하는 데 익숙하지 않지만 말이다. 통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는 때때로 당시 동독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이 지나면서 시선이 무지나 향수에 젖어 미화되곤 했다. 분명 기대가 너무 컸다. 역사적 순간의 체험이 실재를 몰아냈고, 아무도 독일 국민들의 삶이,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일찍이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한스-디트리히 겐서는 어떤 것도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경고했다.

물론 동독의 주민들은 동서독 국민경제의 합병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자신들의 생활 수준이 짧은 시간 안에 서독의 수준과 같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올해와 같은 기념적인 해에 다시 살아나는 감격에도 기쁨과 행복의 감정은 통일 후에 실제적인 관찰 방식으로 대치되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독일 통일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독일은 많은 영역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도 상이한 사회화의 배경이 도처에서 목도된다. 그래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와 튀링겐 주들에서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약 50%가 동독 시절이 지금보다 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동독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경직된 체제였음에도 말이다. 이러한 동독이 사회적으로 정의롭다는 신화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소위 사회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우수라는 선전에도 폴 포트의 캄보디아이든, 김정일의 북한이든 어디서나, 사실은 항상 달랐고 지금도 여전히 다르다.

1989년 동독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 경제적으로 동독은 최후에 도달했다. 사회주의체제는 그 자체로 완전 고용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서방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사회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계획체제가 원하는 사회적 관계들이 거의 저절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사회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¹ 국가 전체의 행위가 이러한 국가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보건체제 전체가 노동력 복구라는 유일한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 인력의 높은 노동참여도는 궁핍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처럼 남녀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었다. 동독 전반의 상황이었던 하수, 대기 및 지질오염과 의료 서비스의 부족은 여성 평균수명 75.7세, 남성 평균수명 69.7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서독 평균수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오늘날 동독 지역의 평균수명은 거의 서독 수준으로 올라 왔다.

독일인들은 자동차를 사랑한다. 서독에 벤츠, BMW,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이 있다면 동독에서는 트래비 601이 있었다. 나중에 80년대에 폭스바겐이 폴로의 40마력 엔진을 장착하게 되기는 하지만, 인공수지 차체와 19마력 이기통 엔진을 가진 트래비는 말 그대로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다. 동독에서 약 9,000 마르크에 팔렸다. 평균 1,000 마르크의 임금 수준이었던 동독에서 힘들게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 차는 주문에서 배달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새 차 가격의 두 배를 주고 중고를 구입하는 것이 상례였다. 바르트부르크(Wartburg)라는 차는 23,000 동독 마르크였다. 1989년 가을에 동독에서 등록된 자가용은

¹-Dirk Hoffmann und Michael Schwartz, *Im Zeichen des Aufbaus des Sozialismus* (사회주의 건설의 징표 속에서)(2003).

390만 대에 달했다. 세탁기는 3,000 마르크, TV는 4,500 마르크에서 6,000 마르크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 사회의 상징처럼 돼 버린 트래비 자동차 말고도 많은 것들이 산업의 낙후와 이십 년 이상의 기술적 낙후에 대한 증거이다. 전화망도 부분적으로는 전쟁 직후의 것이었다. 물론 1차 대전 직후라는 말이다. 장벽이 무너졌을 당시 약 10%의 가구만이 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분단 시절 동서독 사이에는 단지 800개의 전화회선만이 연결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휴대전화와 케이블 TV는 존재하지 않았고 3,500개 지역이 외부 세계와 전화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새로 전화를 연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년까지 달했다. 주민들의 소통은 조직적으로 방해되었다. 그래서 14개 구역 중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국번이 모두 달랐다. 오늘날 동독 주민들 두 명 중 한 명은 전화를 가지고 있고 통신망 기술 수준은 오히려 서독의 수준을 능가해 현대적이다.

통일 후, 겨우 7년 동안에 독일 텔레콤은 '텔레콤 2000'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독 지역에 500억 마르크를 투자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7년이 지나자 서독 수준에 도달했고, 아날로그 전화회선은 180만 회선에서 760만 회선으로 네 배 이상이 증가했다. 추가로 110만 개의 ISDN이 가설되었다.

동독 시절 정년 연금자의 사회보장 역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노인들이 차별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인들은 자유 독일 노조연맹하에 조직되어 있던 통일된 사회부양체제의 부담이었다. 1989년에 연금자들은 평균 450 동독 마르크로 생활을 헤쳐 나가야만 했다. 국가 안전부의 직원이나 국민 군대의 장교처럼 특히,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던 당 간부들은 추가 부양과 특별 부양의 혜택을 누렸고, 학술, 문화, 교육, 의료 부문의 중역들은 소위 '지적 연금(Intelligenzrente)'을 받았다. 서독과는 다른 구매 형태를 근거로 삼고 동독의 사회정책이 무엇보다 식품, 의복, 집세 같은 생필품의 국가 원조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독 연금 생활자의 구매력은 서독 연금 생활자에 비해 약 두세 배 이하 수준이었다. 서독

인들이 사용하던 수명이 긴 고가 산업제품들을 함께 계산하게 되면 이 차이는 더 커진다.

또 다른 차이는 서독의 사회보장이 일반적인 경제와 임금의 추이에 정향돼 있었던 것과 달리, 동독에서는 연금이 경우에 따라, 다시 말해 아주 임의적으로, 그리고 흔히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동독 공산당)의 전당대회와 맞추어 인상되곤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선물들’, 이미 언급한 생필품의 국가 원조, 토지 몰수와 경제 주요 부분들의 국유화 등이 결국 동독의 경제적 붕괴로 이어졌고, 동독은 높은 빈곤잠재성을 가지고 통일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² 동독의 가난은 ‘집단적(kollektiv)’이고, 국가적으로 조직된 낮은 수준의 가난이었으며 80년대에 계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모든 사회주의 불법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진자(Haves)’와 ‘못 가진자(Have nots)’의 차이는 자유사회질서에서보다 현격히 크다.

반면 서독의 사회보장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해당하는 노동법 규정에 정향한다. 즉, 서독을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라고 명시하는 헌법 20조에 나오는 헌법의 목표에서 보듯이 성과 정의와 사회적 조정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는 말이다. 기본법 1조 1항에 나오는 최소한 인간적 삶의 보장에 대한 기본권과 20조 1항의 사회국가 원칙이 결합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물리적인 실존과 사회, 문화, 정치적 삶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에 꼭 필요한 물질적인 전제 조건들이 보증된다.³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보장은 공동체가 도달한 각각의 발달 정도와 실재하는 삶의 조건들에 정향돼야만 한다(사회문화적인 최소한의 실존). 이 사회국가의 원칙은 법치국가에 내재하는 사회 구성 요소의 하나인 정의 구현 노력의 확장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입법의 내용과 법 해석은 법치국가의 틀 안에서 사회국가의 임무에 정향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향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동독의 노인 빈곤은 넓게 퍼진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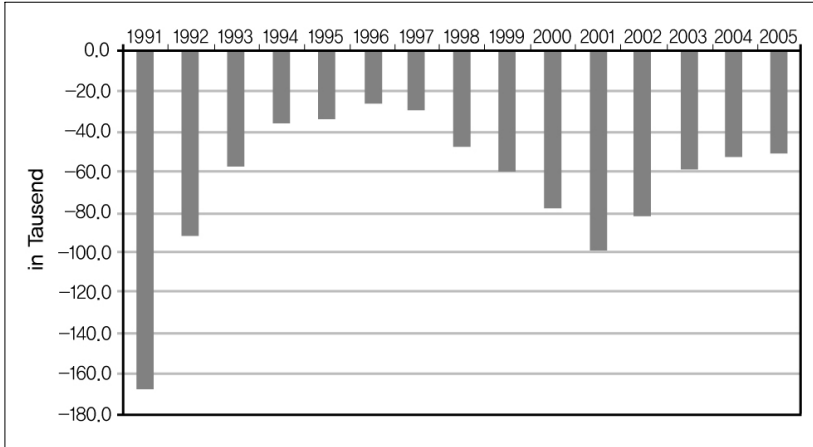
²-S. Leibfried und E. Mädje, Zeit der Armut(빈곤의 시절)(Suhrkamp, 1995).

³-2010년 2월 9일 현재 독일기본법 - 1 BvL 1/09, 1 BvL 3/09, 1 BvL 4/09 -

70년대 초에 동독의 국가 지도부는 주택 부족을 해결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고, 시멘트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건축 부품들을 결합하는 형태인 조립식 건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돼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많은 고건물들의 재개발은 그 후 10년도 더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다. 1970년까지는 주택 할당에 6년에서 8년이 걸렸다. 장벽 붕괴 시점에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철거해야 마땅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것들은 오늘날 유적 보호의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복구돼 옛 찬란함을 자랑하고 있다. 바이마르, 에어푸르트, 베르닝거로데, 아이제나흐, 쉬베린, 드레스덴 같은 역사적인 도시들은 오늘날 다시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동독은 에너지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갈탄을 태워 충당하였는데 이 갈탄은 가장 많이 사용된 난방 재료였다. 통일 후 환경을 더 적게 오염시키는 연료로 전환한 끝에 오늘날 환경은 훨씬 나아졌다.

이것이 대부분의 동독 주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싸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1989년에는 -특히 늦여름에- 수천 명이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고 헝가리나 체코를 통해 동독을 영원히 떠났다. 이들 중 아무도 3일째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던 귄터 샤보브스키가 새로운 여행법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리라고는 예감하지 못했다. 11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던 밤에 국경 차단기가 열리고 사람들이 발포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음에도 1990년 처음 네 달 동안에 여전히 175,000명의 동독인이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갔다. 1989년에는 그 수가 250,000명이었다. 보수적인 선거 연대인 '독일을 위한 연합(Allianz für Deutschland)'이 승리하는 동독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국민 총선거 이후에야 서독으로의 물결이 줄어들었다.

<그림 1> 동독 주민 이주 추이(1991에서 2005까지)⁴



그럼에도 이 시기에 동독 정치인들에게 가해진 압력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신속히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독 마르크가 오면 남아 있겠지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향해 가겠다”라는 위협이 당시 동독 정치가 처한 긴장 상태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건설과 동독 주민의 사회보장이라는 정치적 최우선 순위가 놓였다.

나는 이 시절에 거의 일주일에 한번 꼴로 동독에 다녀왔다. 최고인민회의 국민 총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이라는 일을 통하여 북쪽 로스톡에서부터 남쪽 플라우엔까지, 서쪽 비텐베르크에서부터 동쪽 프랑크푸르트 오더까지 동독을 알게 된 것이다. 1990년 초 어느 화요일에 당시 자민당(FDP) 당수였던 오토 그라프 람스도르프가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이유를 대지 않고 매주 금요일마다 동베를린에 다녀와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손가방을 신고 정해진 시간에 본에서 동베를린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동베를린의 한 빌라에 도착해서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모두 빙점을 갓 웃도는 날씨 속에서 모피

4-Steffen Krönert, 『동독에서의 인구변동』 (베를린: 인구변화 연구소, 2008).

옷깃을 세우고 그라프 람스도르프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새로 설립된 동독 자민당의 수뇌부들로 이날 회동하여 동독 자민당수 브루노 멘에 대한 불신임 신청을 논의하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그라프 람스도르프가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얼마 전에 쫓겨난 국가위원회 수석 에리히 호네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연단에도 여전히 형제들의 우애를 나타내는 악수하는 손이 사회주의의 상징으로 걸려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라프 람스도르프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나는 잠시만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내 질문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은 동독을 민주화시키고 최고 인민회의 선거 조직에서 이들을 도우시오”. 이렇게 해서 나는 동독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직접 알게 될 기회를 가졌다. 5월 중순에 다시 드레스덴 근처에 갔을 때, 동독의 공급 상황은 단번에 달라져 있었다. 가게마다 서방 제품들로 꽉 차 있었고 상인들은 “지금 사고, 6월에 돈 내라”라는 구호로 광고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II. 경제, 통화 및 사회 연합을 위한 국가협약

서독 의회는 수많은 동독 탈주자들을 고려해서 가을에 이루어질 독일 통일 전에 로타 드 메지어가 지휘하는 동독 정부와 경제, 통화 및 사회 연합을 위한 국가협약을 체결하고 비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은 대부분의 서독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받아들였고, 상당한 주권을 서독 측에 이양하였다(예, 연방은행). 이러한 결정은 상황이 안정화되어 가기 위한 일관성 있는 걸음이었고 독일 통일의 길을 평탄케 했다. 실제로 이것은 ‘생산적인 보호’라는 동독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은 1990년 7월 1일자로 통일된 통화 지역을 가진 하나의 경제연합과 단일 통화인 서독 마르크에 합의

하였다. 독일연방은행이 동독과 서독 모두를 아우르는 통화와 발권 은행이 되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마르크로 되어 있던 모든 계약들과 청구들이 서독 마르크로 전환되었다.

통화가 전환되던 날 나는 막테부르크라는 도시에 있었다. 나는 아직도 막테부르크 돔에서 목사가 신도들에게 전달한 인상 깊은 일요일 설교를 똑똑히 기억한다. 당신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에서 살고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행운을 갖지 못했으므로, '아직까지 존재하는 동독'의 주민들이자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당신들에게 특별한 의무가 부여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국가협약과 함께 점차 모든 경제적, 국가적, 사회적 영역의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기초가 놓여 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옛 동독의 국가주도형 구조들이 해체되었고 서독에 존재하던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거나 상응하게 조정되었다. 협약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연방제이며(동독 영토 안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겐 5개주를 부활시킴) 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본 질서를 신조로 삼았다. 이 협약의 보장을 위해 또는 이 협약의 실행을 통해 확립된 법들은 특히,

- 계약, 영업, 개업, 직업의 자유
- 모든 통화 영역에서 독일인들의 이전 자유
- 노동 조건과 경제 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
- 토지와 생산시설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소유권 인정

을 보장하여야 했다. 그때까지의 모든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와 국가규정의 법적 규정들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동독 주민들이 단번에 안정된 통화를 갖게 되었고, 상업과 경제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적절한 환율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을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동독에서는 사설은행, 조합은행, 공공법적 은행이 사유

경제의 원칙에 따라 경쟁 속에서 활동하는 상업은행 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장 경제적 신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했고, 자유로운 화폐 시장과 자본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의 규제되지 않는 이자 형성이 보장되어야 했다. 이와 함께 동독의 국가 독점 은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결사의 자유, 임금자치제, 노동쟁의권, 경영 규약, 기업 결정에의 참여와 해고 보호 등이 서독법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이 계통적으로 정리된 사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사고 보험과 실직자 보험은 각각 국가의 감독하에 공공법의 자치단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야만 했다.

동독의 연금은 더 이상 동독 시절처럼 최소 보험으로 한정되지 않게 되었고 통일 후 지난 20년 동안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동독 지역의 연금은 서독 평균 수준의 약 88%에 달한다.

서독의 노동원조법의 규정들에 상응하는 노동원조를 포함하는 실업자 보험이 도입되었다. 여기서는 직업 교육과 재교육 같은 적극적인 노동정책 조치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여성과 장애자의 관심사들이 특별히 고려되었다.

의사, 약사들이 다시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설과 공공의 병원 단체들이 다시 인가되었다.

동독은 서독의 사회원조법에 해당하는 사회원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1. 교통 프로젝트 독일 통일(Deutsche Einheit)

독일 통일 후에 우리는 아주 빠르게 수십 년간 단절되어 있었던 교통망 연결에 주력하였다. 서독의 교통로가 북남 방향으로 되어 있었던 데 비해 통일 후에는 독일 통일과 함께 도미노 효과를 보이며 개방되었던 동구 시장으로 가는 입구를 여는 것이 중요했다.

1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교통 프로젝트 ‘독일 통일’은 동독과 서독 사이에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교통망 연결의 근본 토대를 형성했다. 이 프

로젝트는 9개의 선로 계획과 7개의 고속도로 계획 및 1 개의 수로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전체 예산·규모 390억 유로인 이 프로그램은 1991년 동독과 서독의 공동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08년 말까지 예정된 투자 중 75%에 달하는 286억 유로가 이행되었다. 교통 프로젝트 ‘독일 통일’의 17개 사업이 현재 모두 건설 중에 있거나 이미 완결된 상태이다. 850킬로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신설되었거나 6차선으로 확장되었다.

2. 독일 통일 기금

독일 통일 기금은 1990년에 동독의 지역 조직들 즉, 시와 지자체들의 경제적인 기본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금 규모는 원래 1990년에서 1994년까지 전체 1,150억 마르크에 달했고 1991년부터는 연간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도록 되어 있었다. 이 규모는 증액을 통하여 여러 번 증가되었다.

1990년 5월에는 재정 규모가 1,150억 마르크(DM)로 계획되었다. 3개월이 지나자 이 금액은 1,463억 마르크로 늘어났고 1993년 3월에는 1,607억 마르크로 증가되었다.

3. 1차 연대협약

1993년에 결정되고 2005년에 종료된 연방 국채통합프로그램(1차 연대협약)과 함께 전 독일의 재정 조정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장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 동독 신생주들의 경제 구조가 서독 수준에 맞춰진다.
- 삶의 상황의 통일화가 도달된다.
- 독일 경제회복의 재정을 위한 항구적인 기초가 마련된다.
- 건강한 경제의 기초인 공공 재정을 견고히 한다.

동독에서 지급된 사회 복지 보조금의 50% 이상이 1차 연대협약 자금에서 흘러나왔다. 부문별 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용은 표와 같다.

<표 1> 1999년 자금 사용 내역

경제 인프라 구조	12.5%
경제원조	5.8%
사회복지 보조금	51.7%
자유로운 목적 할당	24.4%
기타	5.6%

4. 2차 연대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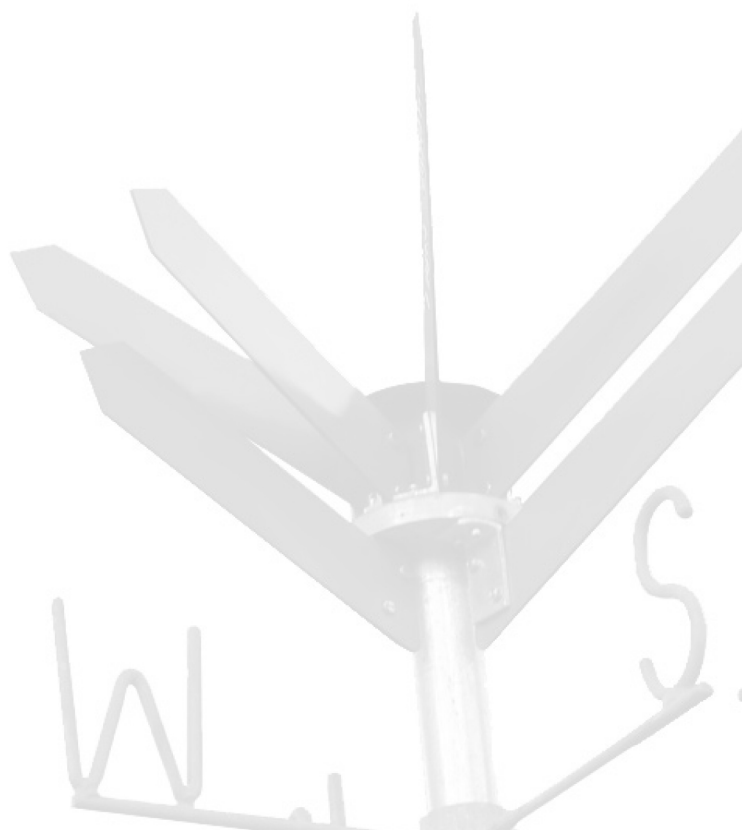
2차 연대협약은 2005년 1월부터 유효했다. 연방정부는 2019년까지 2차 연대협약을 위해 1,560억 유로의 재정을 마련했다.

2차 연대협약의 실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동독의 주들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 재정에서 1,050억 유로의 자금을 받는다. 이 자금은 인프라 구조 구축과 하위 지자체들의 재정력 조정에 쓰인다. 이 자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다. 각 주들은 매년 발전보고서에서 재정계획위원회에 그 사용에 대해서 보고한다.
2. 그 밖의 518억 유로는 공동체 과제를 위해 쓰인다. 이것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의 구조 기금에서 오는 자금과 투자 보조금도 이 프로젝트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자금 사용의 책임은 각 주들이 지는데 이것은 각 주들이 지역적, 구조적 발전의 주안점들을 가장 잘 평가하고 해당 자금 저당을 적절하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자금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통제한다.

독일 통일로부터 20년 후의 결산은 이뤄낸 성과들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독일 동쪽에 다섯 개 주를 건설한 일은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의 역사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적인 발전은 긍정적이다. 아직 서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 성장과 함께 증가적으로 신생주들의 재정력과 납세력 역시 서쪽 주들의 평균에 비슷해 질 기회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될 때까지 신생주들은 서쪽 주의 연대에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 천육백만 동포가 다시 얻게 된 자유를 위해 치르는 대가다.

제1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김 영 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윤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남북관계로는 독일 통일과 같은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뤄지기 힘듭니다. 사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겉보기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 통일은 교류와 협력으로 동독 주민들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동유럽을 찾아가 많은 변화를 이끌었고, 그 힘을 덧입어서 동독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당시 동독 주민들은 “우리는 시민이다. 우리에게 여행의 자유를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막상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그들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독의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독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통일이 되면 건강하고 부유한 사회,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류와 협력도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통일 환경도 중요하지만 동서독 통일의 주체는 동독 주민이었습니다. 동독 주민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은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가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독일과 같은 급진적인 통일은 안 됩니다. 저는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 통일 이전 동서독 간 수많은 교류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 독일은 통일 이후 엄청난 경제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로 남한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서독의 10배 이상입니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통일은 적잖은

후유증과 어려움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한국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통일 독일도 통일의 후유증과 어려움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급진적인 통일보다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교류 왕래 및 이산가족 방문 활성화, 구월산·칠보산·묘향산 소규모 관광, 평양 옥류관 서울 분점 개업 등 교류협력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 호 열 (고려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유호열입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독일 통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독일 통일을 반기면서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분단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독일 통일 교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회에는 우리와 독일은 다르다는 사고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일 통일은 우리가 배워서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 방법을 학습했다고 우려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과 통일 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한반도 분단을 관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햇볕정책은 우리의 통일 담론을 통일인지 아닌지도 규정할 수 없는 묘한 말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 통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 대비를 위한 의지를 갖춘다면, 통일 비용 문제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일 통일 주역은 동독 주민이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독일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기대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통합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20년 전 독일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한 방어벽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독일 통일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의 경험을 체제 유지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북한지도부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만 된다면, 북한 지도부의 어떤 교활한 정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현실은 현 정부가 과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독일 통일의 성공 요인을 우리사회에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북한문제는 교류협력으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구소련의 군사력 철수가 동독 해체를 가져왔던 것과 유사한 상황은 북한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독일은 역량과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정치 교역을 통해 동서독 주민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일 사회의 성숙한 관용 정신이 존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통일연구원의 통일대계와 관련한 심층적, 전략적, 효과적인 연구 성과물들이 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용 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안녕하십니까, 정용길입니다.

저는 그동안 독일 통일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왔습니다. Seidt 대사님께서도 “한반도 역시 30년 이후에 통일될 것이고, 서울이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되며, 통일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독일은 강대국이었기에 통일이 가능했지만, 남한과 북한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내적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당시 서독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동독에서도 평화적 혁명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990년 3월 18일 동독 총선에서 서독의 콜 수상이 지원하는 독일연합정당이 승리하여 집권했습니다. 당시 총선 결과는 서독과 동독의 집권당이 동일한 성격의 정당으로 재편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당시 동독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더불어 남북관계는 아직 통일을 이야기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현재 남북관계로는 통일이 어렵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본 학술회의를 묵념으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은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암담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 독일 통일 당시 주변국 관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구소련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수상 콜의 경제력과 외교력이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변국들을 향해 외교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외교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독

일 통일의 힘을 보면서 우리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전 당시 독일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만일 독일이 분단국이였다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과연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된 국가의 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통일을 이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Uwe Wissenbach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사)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독일 통일과 한반도 상황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에게는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가 없었습니다. 통일 실행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이유입니다. 독일은 특별한 통일 계획 없이 통일을 진행했으나 계획한 것보다 훨씬 잘 진행됐습니다.

한국에 온 뒤 통일 비용 논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통일 비용은 투자입니다. 통일 비용을 순손실이 아닌 미래투자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2009년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통일 한국이 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도 통일 한국이 정치 강국 및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북한은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동독이 갖지 못했던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장애 요인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 통일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독일 통일로 인한 유럽 내 세력균형 변화를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독일의 우방국들마저 독일 통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독일은 동서독 통일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가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은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국제사회 동의에 힘입어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한국도

통일을 앞당기려면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은 유럽통합에 유익하게 작용했습니다. EC(유럽공동체)의 EU(유럽연합)으로의 발전, 유럽 화폐경제통합 등이 독일 통일의 결과물입니다. 통일 독일이 구 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할 때 EC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독일도 많은 기금을 조성하여 EU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U에 대한 투자 중 25%가 독일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75%는 기타 유럽 국가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독일이 아닌 기타 유럽 국가들의 투자액이 동독에 유입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다자간 기구를 활용한 기금 조성은 정치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과거에는 프랑스 유권자들이 기금을 조성해 동독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다자간 통로인 EU를 활용하여 국가 정통성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반도 통일 비용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떠안고 갈 것인지,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독일과 한국의 또 다른 차이점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은 사실상 EC 회원국이었다는 점입니다. 동독은 생산성 낙후로 교역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분명히 교역은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동독은 교역과 관련된 규제들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독 간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가 존재해 지속적인 상호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근간이 됐습니다.

독일 통일은 한반도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 노력의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또한 한국은 통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개혁 시도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구소련 붕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독일 통일 등을 바라보면서 개혁은 위험한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평양의 과감한 개혁 단행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첫째,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못하든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다소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저는 한반도의 점진적 통일을 원하지만 급작스런 통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즉, 점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가 모두 필요합니다. 넷째, 한반도 통일의 출발점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북한이지만, 통일을 지속시키는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독 분리의 책임은 독일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 대전을 발발하게 만든 책임이 독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독일은 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1910년 한국은 민족자결권을 박탈당했고, 3.1 운동은 일제에 의해 탄압을 받았습니다. 1945년 한반도는 다시 분단의 피해자로 전락했습니다. 독일은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민족 스스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으며 민족자결권을 지닌 국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alter Klitz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저는 금강산 문제로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타 문제의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북한의 원자력 발전을 저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을 극복할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 순수한 에너지 생산 목적이 아닌 핵무기 개발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수정안을 통하여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보장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Ostalgie(동독에 대한 향수) 문제의 해결은 어렵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지금까지 서독 주민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따라서 Ostalgie 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게 적응하겠지만, 오랫동안 동독 사회 환경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은 최소한 10~15년 정도가 지나야 서독 사람들과 비슷한 사고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는 적대국 관계가 협력하는 이웃으로 발전하는 성공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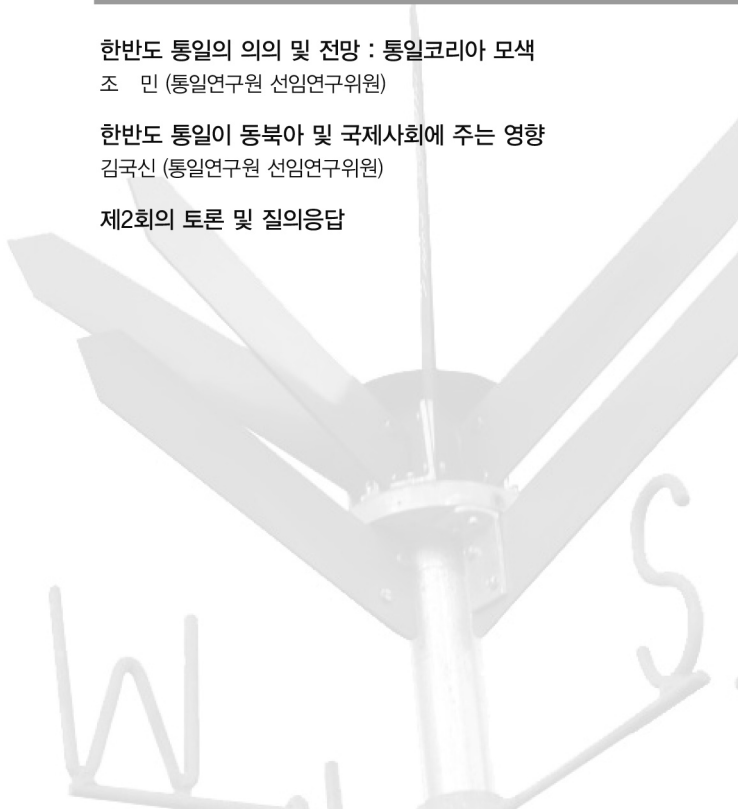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 모두가 남북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적잖은 북한 주민들이 조선노동당을 지지할 겁니다. 한 사회에서 패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치적 혼란과 위기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암시합니다. 한국은 조선노동당의 권리를 묵살할 수 없을 겁니다. 독일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사회는 과거 독일 공산당에서 현재 민주당으로 명칭을 변경한 세력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독일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도 변화된 조선노동당의 잠재력이 독일의 사회주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의

한반도 통일의 의미 및 전망 : 통일코리아 모색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한반도 통일의 의의 및 전망: 통일코리아 모색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통일을 향한 결단

1. 평화통일은 가능한가?

분단 65년째를 맞이하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화해협력의 혼풍은 한반도의 긴장과 남북갈등의 삭풍에 밀려나기를 거듭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화해협력이 정착되지 못한 현실은 통일 문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통일보다는 평화와 화해협력이야말로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절박한 과제임을 확인시킨다. 여기에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지리(支離)한 공방, 북한의 주기적인 무력도발, 강고하고 비타협적인 폐쇄체제는 남북한 통일 가능성에 대해 커다란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을 가늠하기란 어렵다.

통일은 벅찬 감동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앞서,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분단이 장기화되고 거의 고착화되어 왔으므로 통일은 매우 지난한 과업으로 인식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분단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 현재 남한 인구의 대부분이 해방과 전쟁 이후 세대인데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주력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대는 개개인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존재의 불확실한 위상, 역사 의식의 부재,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등으로 분단 상황 자체에 대한 고통과 피해 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통일 문제에 별다른 관심도 없다.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통일의 의지나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당연한 소임으로 여기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어둠이 길고 깊어질수록 동트는 새벽이 다가오듯이,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민족사의 장(章)을 여는 통일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21세기 인류는 힘(파워)과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던 20세기와 결별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아래서 협력과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유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존중은 세계사의 불가역적인 추세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문명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인류사의 진전을 거스르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예외적 공간의 존립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 “하늘의 뜻을 따르면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라고 했듯이, 남북한 간 순천·역천(順天·逆天)은 이미 오래 전에 판명났다. 통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우리의 선택 사안이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 주민 모두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선택을 넘어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업이다.

2. 통일이냐, 새로운 분단이냐?

통일을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한반도는 지금 통일 과정에 들어섰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사의 흐름에 조응하는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이 닥칠 수 있다. 분단과 전쟁은 우리 민족의 바람과 선택과는 무관한 강대국 패권정치의 산물이었지만,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결코 역사적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어야 한다.

통일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은 결코 낙관적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다. 분단국가 상태로는 21세기 민족 미래를 열어가는 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수립은 한반도 통일 상황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은 통일대계(Grand Design for Korean Unification) 수립으로 마련된다. 또한 국가발전전략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일 청사진(Blueprint for Korean Unification)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¹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다. 하나는 북한과의 ‘불안한 동거’ 또는

¹ 조민·박형중·전봉근·이수석, 『통일대계 탐색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12), p. 3.

친중화된 북한과 더불어 분단국가 상태를 ‘그럭저럭’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다. 이는 중화제국의 패권 아래서 새로운 분단체제가 구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분명 다른 길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한반도 통일의 길이 있다. 한반도의 분단국가 상태를 해소시켜 하나의 국가 상태 즉, 통일코리아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다. 통일코리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허브(Hub)로서 동북아 ‘평화의 축’(Axis of Peace)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교이자, 21세기 인류사회의 새로운 메신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잖으면 동북아 지역의 중화적 질서 속에서 새로운 분단체제를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섰다. 통일은 더 이상 선택 사안이 아니다. 통일은 자립적 국가의 미래를 위해 회피하거나 유보될 수 없는 그야말로 숙명적인 과제이다. 통일은 오로지 우리의 판단과 의지, 그리고 역량에 달려 있다.

II. 통일의 의의와 방향

1. 통일이란 무엇인가?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가 수립된 상태를 의미한다. 한반도 주민 모두가 하나의 국명과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국민으로 함께 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² 이처럼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되는

² 통일(統一 unification)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럿을 몰아서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하는 것”으로, 하나로 통한다는 말이다. 통합(統合 integration)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등을)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으로, 통일과 통합의 언어적 구별은 뚜렷하지 않다. 통일은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정치체(political entity)가 하나로 결합되는 정치적·국제법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통합은 민족 또는 한 국가 내부의 다양한 구성 부분 가운데 상호 동질적인 부문과의 조화와 융합 과정을 뜻한다. 예컨대 남한 사회 내의 국민통합, 사회통합 등을 의미하며, 남북 간에는 경제통합, 군통합, 제도통합 등을 통합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통일은 가부(可否)의 문제로 남북한 국가통일의 경우 통일국가나 분단국가냐로 대별되는 문제이며, 통합은 동일 부문의 결합 수준이나 정도의 문제로 이해된다.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상태로, 하나로 합하려는 바람은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원상회복으로써 통일

통일은 흔히 남북통일 또는 민족통일로 일컬어져 왔다. 남북통일 또는 민족통일은 둘로 나누어지기 이전 상태 즉,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원상회복을 지향한다. 남북통일이 공간적 차원에서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을 한국의 주권 영역에 포함시키는 국토회복이나 국토통일을 의미한다면, 민족통일은 마치 결손가족이 결합하듯 강제적으로 나뉘어졌던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재결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토통일은 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국가 주권 아래 두면서 한반도 주민이 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민족통일은 자주적 근대 국가의 주체로서 민족이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태를 뜻한다. 유럽 역사에서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는 일반적 현상이 아닌 예외적 사례에 해당한다. 하나의 민족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민족국가 논리는 민족주의의 정치적 지향으로 종종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와 하나의 민족이 여러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1민족, 1국가'의 경우보다 더욱 광범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 민족의 경우 1천 3백여 년 동안 하나의 통일국가 상태를 유지해온 오랜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하나의 국가 상태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여기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비정상적으로 보면서 하나의 국가 상태로 회복하려는 회복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분단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한반도 전역의 국토통일과 결손민족 상태를 극복하는 민족통일에 대한 원상회복을 당연한 과업으로 여긴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 또는 민족통일은 둘로 나뉘지기 이전 상태 즉,

국제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국제법적 사건(event)으로부터 그 후 제도적·사회적·문화적 부문 등 다양한 부문의 통합을 거쳐 국가적·민족적 삶 자체가 하나로 되는 상태이다.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이전의 원상회복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통일은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단순한 원상 복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강점기에 국토는 비록 강점당했지만 남북으로 두 동강난 상태는 아니었으며, ‘국가 없는 민족’ 상태였지만 민족의 일체성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국토가 나뉘지고 민족이 서로 갈라서지 않았던 과거 형태로의 단순한 복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 현상타파로써 통일

통일은 분단국가 상태에 기반을 둔 남북한 역학관계의 변화로, 분단체제의 현상타파(Breakthrough of Status Quo)를 의미한다. 통일로 인한 현상타파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동북아 국제관계의 ‘안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국가 상태는 남북한 간 불가역적이고 날로 심화되는 불균형 상태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 해소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남북한 간 심각한 국력 격차로 인한 부조화와 북한체제의 한계 상황은 ‘현상’ 유지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통일은 두 개의 통치 구조, 사회 조직 및 운영 원리, 국가 상징 등 여러 측면에서 어느 한 쪽의 포기나 지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상 타파적이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간 긴장과 갈등의 구조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한편, 한반도 분단 구조 위에 형성된 동북아 국제질서를 타파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다. 새로운 미래창출로써 통일

통일은 한반도 주민 모두에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미래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물론 통일로 인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내용과 형태가 남북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일은 북한 지역에 인민 주권의 원리인 민주주의 구현과 더불어 사적 소유권과 경쟁 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억압과 통제

그리고 예측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고 풍요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일은 개개인의 가치, 삶의 양식에서부터 사회 조직과 국가 제도의 운영 원리 및 방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말하자면 통일은 8천만 한민족의 새로운 공동체 형성 과정이며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이다. 통일은 물론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 과정에 어느 정도의 혼란과 갈등은 충분히 예상되며 회피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특히 남한 주민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통일은 더 이상 선택적 사안이 아니며 새로운 미래창출을 향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고통과 희생을 줄여야 하며, 이는 우리의 충분한 준비와 함께 올바른 방향 설정에 달려 있다.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본능에 호소하는 통일 당위성으로는 부족하다. 분단 구조의 현상타파 의미와 통일비전, '좋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요구된다. 개인이나 정부나 현실에 안주하기 쉽고 현상타파를 위한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한다. 당장 눈에 띄는 장애 요인, 많은 노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과업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현상 변경적이고 모험적인 일을 주저한다. 통일은 국민적 열망과 지지, 그것을 토대로 한 정치지도층의 통일 의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통일 전략가 그룹이 통일전략을 구상·확립하고,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업 과정이다. 이처럼 통일 열망이 아래로부터 상승하는 과정과는 달리, 역으로 국가 발전과 민족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정치지도자의 통일 신념과 의지는 국민들의 통일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희생과 인내를 설득·호소하면서 통일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처럼 통일은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가 정치지도층의 의지 및 결단과 부합될 때 다가갈 수 있다. 여기에 통일로 다가가는 데에 통일비전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통일의 기본 방향

가. ‘바른 통일’은 어떻게?

‘바른 통일’은 우선 ‘평화적 합의통일’을 뜻한다. 무력통일이나 강제적 통합은 상상할 필요가 없으며, ‘바른 통일’을 위해 남북한 간 평화적 합의 통일 방식 이외의 어떠한 통일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하는 흡수통일은 독일 통일의 평화적 방식과 전쟁에 의한 베트남식 통일 방식이 있다. 그와 함께 합의통일은 예멘 통일이 전형적인 사례이나, 예멘의 합의통일은 곧 결렬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로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베트남식 무력통일을 거부하는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하며, ‘일대일’ 통합 방식에 의한 예멘식 합의통일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남북한 7천5백만 명의 합의에 의한 통합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남북한 간 평화적 합의통일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바른 통일’은 현존하는 남북한 두 체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통합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³ 통일의 핵심은 남북한 두 개의 체제(제도)와 이념이 하나로 통합되는 데에 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아래 살고 있다. 남한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전혀 공통성을 찾기 어렵다. ‘하나로 통하는’ 통일 형태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의 절충 또는 수렴 형태보다는 한쪽에 의한 다른 쪽의 흡수·동화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체제통합은 우위의 체제가 열위의 체제를 흡수·해소시키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문명적 순리에 부합하는 과정이다. 다만 체제통합을 ‘평화적 합의통일’의 원칙 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는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3-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이제는 통일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 2009.11.5), 참조.

있다. 그럼에도 남한 사회는 사회적 모순과 문제에 대해 비판과 성찰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스로 개혁·개선할 수 있는 사회이다. 반면 북한의 퇴행적이고 폭압적인 수령체제와 자폐적인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로 통하는” 통일은 남북한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유, 시장경제,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번영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바른 통일’은 평화적 합의통일의 원칙 아래 민주주의와 자유의 인류 문명사적 진전에 부응하는 길이어야 한다.

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지평 확대

(1) 자유민주주의의 지평 확대

민주주의와 자유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 차원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는 대개 복수정당제와 주기적인 선거체제에서 찾는다.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등의 광범한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재와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독재정권의 길을 열어 주거나 인종갈등과 민족분쟁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와 달리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법치), 권력분립, 언론·결사·종교·재산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에다 최근 자유민주주의는 행복권, 사회보장권까지 포괄하는 이념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는 ‘현정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기본적인 자유주의 원칙들을 보장하는 체제로서, 복수정당제와 선출 정부 형태만을 구비한 형식적 민주주의와는 구별된다. 통일코리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대한민국 헌법(제4조)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일의 최종적 형태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적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적 합의통일이어야 함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으로 정의하였다.⁴ 이러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정책으로까지 이념적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원칙 아래서 소득 분배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정책을 입안·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시장 개입과 공적 역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⁵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

4_헌재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5_1996. 4. 25. 결정 92 헌바 47사건; 헌재 2001. 06. 28, 2001헌바132, 판례집 제3권 1집, 1441.

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사회 민주주의적 지향성과 함께,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는 자유시장 원칙을 사회적 형평 원칙과 접목시키는 데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론은 자유 원칙을 근본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사회이론과 사회정의 원칙을 근본이념으로 삼는 윤리적 사회철학과의 조화가 골간을 이룬다. 사회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정의 두 요소는 상호 긴장이 유지되면서, 어느 한 측면이 오랜 기간 지나치게 팽창되는 상태를 억제하는 한편 어느 한 이념이 우위적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경쟁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형평(공평)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자유시장경제의 폐해로 인한 경제적 부정의와 계층화의 심화는 결국 정치·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을 초래하여 공동체 해체를 가져오고 통합을 저해한다. 따라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수용한다면 다양한 세계관을 서로 잇는 통합성을 통해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유·정의와 더불어 사회적 안정과 인간존엄성의 구현을 추구할 수 있다.⁶

사회적 시장경제는 일찍이 서독이 추구해온 이념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와의 관계에서 경제정책적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가 다시 부각되었다.⁷ 동독 주민의 서독체제

6- 통일 모형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내부의 정치적 투쟁을 기본으로 하며, 계급 간의 역관계에 의해서 복지 수준이 결정되는 데 비해 민주사회주의는 계급을 넘어 민주화, 다원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가정,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면서 자본주의적 정치 질서를 개혁해 나가는 이념"이라고 정의한다. "굳이 표현한다면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느슨한 형태이자 확장된 체제로서 인간적 사회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152.

및 이념으로의 자발적인 편입 요구와 서독 주민의 수용이 어우러질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뒷받침되었다. 흔히 독일 통일은 평화적 흡수통일로 얘기되나, 동서독 주민의 합의에 기반을 둔 흡수·편입·합류 방식이었다. 말하자면 합의에 의한 흡수·편입통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독의 경제력 못지않게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시민주의의 탄탄한 사회복지 기반이 사회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포용하면서 통일 과정에서 서독 주민의 양보와 동독 주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동서독 통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양 체제의 비교적 높은 친화성(affinity)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점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다. 서독은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국가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좌파적 이념체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굳건한 토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동독은 동구 사회주의의 진열장으로서 가장 발달한 선진 사회주의 국가였다. 이런 배경에서 양 체제의 통합은 이념 및 체제 통합 차원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형태로 진전되어 통합 과정에서 큰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테면 서독은 전통적인 사회보장국가체제에서 동독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동독 주민들이 국가(계획) 중심 사회로부터 시장 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혹한 개인 책임 사회의 충격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동계급 중심의 서독 시민주의 국가 정치체제 및 이념이 사회주의 국가 동독 주민들의 가치체계와 서로 친화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 북한이 남한에 합류·편입되기를 원하고 남한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의 합류·편입을 바

7-Rolf H. Hasse, Hermann Schneider, Klaus Weigelt(Hrsg.)/이규석·이유정·정연진·최용호 번역, 『사회적 시장경제 - 독일경제정책 A에서 Z까지』(주한 독일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2005.12), pp. 242~267.

라지 않는 경우 강제로 끌어오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독일 통일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순조롭게 이루어진 사실에 착안한다면,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먼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한 사회와 체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이념적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복지체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통일 준비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확대·심화되고 있는 남한 사회의 현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III. 통일 환경

1.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적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도 주변 지역의 힘의 역학관계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21세기 한반도는 또 다시 중화제국의 패권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은 국가 존속의 한계 상황에 내몰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령체제하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합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에게 ‘위험스런 국가’로 상당 기간 존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제유지를 위해 스스로 친중정권을 창출하거나 실질적인 보호국으로서의 존립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변화된다면, 분단국가 한국은 해양 세력인 미국·일본과 대륙 세력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팍스 아메리카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미국은 130년 이상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Long-Run’ 시대는 저물

어 가고 있다. 이제 미국은 20세기의 미국이 아니다. ‘9·11 테러’와 그에 이은 아프간·이라크 침공 등으로 인한 과도한 국력 소모로 미국의 힘은 가파르게 퇴조하기 시작했다. 어느 면에서 미국은 헤게모니의 지속을 논의하기보다는 미국과 세계에 보다 덜 충격적이면서 차별하며 점진적인 후퇴 즉, ‘우아한 퇴조(a Way to Descend Gracefully)’를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주목된다.⁸ 현재의 국제질서를 미국의 쇠락이라는 측면보다 다른 모든 나라들 즉,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으로 이해하면서 워싱턴이 이러한 새로운 국제조류에 적절한 대응과 적응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⁹ 그러나 미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유보적인 견해 모두 미국의 상대적 퇴조에는 공감하고 있다.

2020년경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도 연 9%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의 기여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5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력 신장세가 멈출 것이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약하다.¹⁰ 중국이 연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미국이 연 2% 경제성장에만 머문다면 2018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¹¹

미국 경제는 공황 이후 초유의 금융위기로 현재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시기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구매력지수(PPP)로 평가된 GDP 규모 측면에서는 훨씬 빠른 시기 내에 미·중 양국의 경제 규모가 역전될 가능성이

8-I. Wallerstein, “The Eagle Has Crashed Landed,” *Foreign Policy*, (July–August 2002)

9-F.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W.W.Norton & Company, 2008)

10-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World Development Report* (World Bank, 2007)

11-『매일경제』, 2009년 7월 26일.

이 있다.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창설을 주도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한 세기 이상 인류 문명을 선도해온 국가로서 ‘환영 받은 제국’이었다면, 중국은 인류 사회에서 아직 ‘환영 받지 못하는 제국’의 이미지가 강한 신중화주의 패권 추구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2. 국제질서: G2 중심의 경제적 다극질서

군사력 차원에서 미국에게 도전할 국가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재편 측면에서 21세기의 초입 단계인 현재,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미국, 중국, EU 중심의 국제질서로 개편되면서 세 중심 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 중이다. 미국, 중국, EU가 상호 견제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과거의 소비에트 블록,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이른바 ‘제2세계’ 국가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게임이 전개되고 있다. ‘제2세계’의 미래가 이들 세 중심 세력과 어떻게 관련을 맺느냐에 달려 있다면, 세 주도 세력의 미래도 ‘제2세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 구도 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쇠퇴와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로 미국의 미래 역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¹²

G2의 미중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중심의 군사적 단극체제하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두 차례의 ‘미·중 전략 경제대화’(2008.12, 2009.7) 이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과 채무국과의 만남”이 정례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된 중국 자산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는

¹²-P. Khana,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Global Order* (Random House, 2008)

입장이며,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려 든다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미국에서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나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산중의 지름길을 계속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지만, 얼마 동안 다니지 않으면 풀이 우거져 막힌다’(山徑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用則茅塞之矣, 孟子 『盡心』)”라고 하여 미중협력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단극적 위상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위축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 규모의 상대적 축소 및 위상의 변화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우월적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이미 다극체제로의 변화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올 초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부상에 따른 다극체제로의 변화에 대비한 미국의 세계전략 재설정 방향과 리더십 유지 전략을 제시하였다.¹³ 현재 미국은 과거 60여 년 동안 세계 질서와 안보를 유지해 왔던 유일 패권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극체제 아래서 미국의 역할과 리더십 형태의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3. 우호적 통일 환경 창출

독일 통일은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종주국 구소련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 과정 속에서 서독은 동서독 통합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콜(H. Kohl) 수상은 영국 대처(M. Thatcher) 수상과 프랑스 미테랑(F. Mitterrand) 대통령의 독일 통일에 대한 거부에도 미국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의 협력과 지지를 업고 구소련 고르바초프

¹³-A. M. Denmark and J. Mulvenon (eds.), *Contested Commons: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in a Multipolar World*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010)

(M. S. Gorbachev)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마침내 통일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독 정치지도자들은 국제질서의 변화로 조성된 통일 우호적인 환경을 놓치지 않았으며, 천재일우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동서독 통합 상황과는 달리, 현재 한반도의 통일 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중국이 세계대국으로 급격히 부상했으므로 통일 환경은 매우 복잡한 국면에 처했다.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 서북부지역 색외(塞外)민족의 흥기는 한반도와 중국 북동 지역의 정치적 강세로 이어졌지만, 20세기 후반 이래 중국 서북부 지역의 제민족이 중국에 대부분 통합되었으므로 한반도는 대국 중국의 중압감을 쉽게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처럼 우리의 통일 환경은 독일 통일의 국제 환경과 전혀 다른 국면에 처했다. 한국 통일에 가장 우호적일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반면, ‘한반도의 통일로 북한의 붕괴도 바라지 않는(不統不亂)’ 중국의 국력은 날로 강성해지고 있다. 이는 불가역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통일을 머뭇거리다면 역사의 신(神)은 더 이상 우리 한민족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시켜 지지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여기에 대미·대중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대미관계에서 21세기형 한·미 가치동맹에 기반을 두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한편, 대중관계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통일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며,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의 안보 우려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북아 지역 공동번영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미전략과 대중전략의 갈등적 상황을 슬기롭게 회피하는 한편 상호 보완의 공동이익 창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

화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 문제는 이제 ‘친미·반미’의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한반도 통일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미국의 패권이 퇴락하는 ‘미국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우호적 통일 환경 창출의 기본 방향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원칙 위에서 ‘비핵평화국가’의 의지와 실천적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와 함께 비핵평화국가의 실천 전략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동북아 협력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과 대안적 모색을 제시해야 한다. 그와 함께 통일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 제시도 중요하다.

IV. 통일의 전망

1. 북한 미래 대비

북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북한체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했다. 지금도 북한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전망적 태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세계사적 추세를 거스르는 행보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한층 어렵게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 시기에 중국과 함께 개혁·개방의 길로 나왔더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 노선을 고수하였고, 그 결과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사안이 되어왔다. 핵보유 의지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피폐와 만성적 식량 위기로부터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정일 수령체제는 위기의 실체를 객관적·사실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지금은 ‘포스트 김(Post Kim)’ 즉, 후계자 구도 확립 과정에서 발전적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 김정일 시대의 조락(凋落)

김정일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과 함께 등장한 김정일 시대는 ‘국가의 실패’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쳐 엄청난 아사자와 대량탈북 사태 속에서 출발했다. 그 후 김정일은 피폐해진 경제와 만성적 식량난에도 군사제일주의 노선인 ‘선군정치’에 입각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로 통치 기반을 닦았다. 현재까지의 김정일 시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단계인 1994년에서 2004년 시기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전개되었다. 즉, 이 시기에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인 시장화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의 배급체제가 해체되면서, 장마당·농민시장 형태의 초급 단계의 시장화가 진전되었다. 식량 배급은 사회주의 통제체제의 기본적인 계급화 원칙을 공공연하게 반영하는 메커니즘으로, 공식분배시스템(PDS)의 붕괴는 계급화 원칙의 훼손을 가져왔다. 이후 이러한 배급제의 붕괴로 국가가 아닌 시장이 식량 할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 북한은 제1차 핵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의 틀 하에서 거의 5년 가까이 대미(對美) 타협 국면이 지속된 시기를 맞이하였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더불어 대외관계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들자, 2002년 시장화 추세를 용인·수용하는 ‘7·1조치’를 단행하였다. 경제 재건 조치 당시 이미 경제성장은 10년 넘게 하향 국면을 치달았고, 대부분의 공장 설비가 망가지면서 중앙계획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태였다. 이에 북한은 산업 부문의 해체에 따라 무정부적으로 진행된 시장화 과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이른바 ‘계획경제 + 시장화’의 혼합형 이중 체제가 유지되는 듯했다. 이러한 조치는 당국의 자발적 개혁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양보로 나타난 수세적·방어적 조치에 불과했으나, 어쨌든 ‘상향식 시장화’ 과정이 나타났던 시기였다.

김정일 시대의 두 번째 단계는 ‘시장에 대한 체제 측의 반격’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 다시 시장화 추세를 거스르는 반개혁적 조치가 취해

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2006년 중반부터 “자본주의 환상을 품고 망쳐놓은 것을 다시 고쳐 사회주의 원칙에 의거한 경제관리 제도를 재확립하는” 방향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시도했다.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 북한 사회는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신흥 상인 계층의 성장, 농민층의 자립 기반 확대, 권력기관의 구조적·체계적 부패, 국가 자산의 횡령·은닉 등의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체제 밖에서 자생적 경제 기반을 확립한 시장 친화적 세력이 성장해온 과정이자, ‘안으로부터’ 체제 자체가 해체·와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의 후반기는 체제 차원에서는 ‘시장과의 전쟁’이, 주민생활 수준에서는 ‘장바구니와 완장(보안경찰)’과의 대립이 일상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으로 통제경제체제의 복구를 시도했다. 화폐개혁은 더 이상 심각한 수준의 시장화와 체제 해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에서 단행된 조치였다. 상인 자본의 몰수로 시장 세력을 몰락시켜 국가통제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또한 이 조치는 후계자 구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광범한 시장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와 연계된 반사회주의 세력의 물질적 기반을 와해시켜 후계체제의 토대를 굳히겠다는 시도였다. 그러나 시장 세력과 상인을 겨냥한 전략은 되려 외화나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새해를 넘기자마자 엄청난 인플레이와 식량 부족 등으로 대부분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면서 북한 당국조차 당혹감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장과의 한판 승부는 이미 판가름 난 모습이다.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사회주의 세력의 타도 차원에서 단행된 화폐개혁은 향후 북한체제의 내파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게다가 세습후계자 구도 문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나. '포스트 김' 정권 전망

김정일 시대는 2012년~2013년 무렵 체제 지속의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하였다. 그러나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북한의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며, 경제회복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의 후계자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세습후계체제 구축은 쉽지 않다. 더욱이 향후 시장과의 승부가 실패로 귀결된다면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상실과 함께 시장화는 더욱 빠른 템포로 진행되면서 체제 이완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목표인 '강성대국'은 경제회복 측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2012년~2013년 사이 체제 지속의 전환점을 맞이할 개연성이 크다. 여기에 담보상태 지속, 급변사태 발생, 그리고 연착륙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1) 담보상태

현 상태가 유지되는 담보상태가 예상된다. '포스트 김' 정권이 통제체제를 정비하면서, 경제특구 설정 등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그럭저럭' 체제가 유지되는 담보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끊으면 북한체제의 작동은 거의 정지되며, 이 경우 북한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붕괴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북지원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중국의 후원과 도움이 북한체제의 회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대북지원에도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체제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외세 의존적인 '포스트 김' 정권이 중국의 보호 아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하면서 정권 유지를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실패 추세를 억제하기는 어렵다. 5년~10년 정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버틸 수도 있으나, '포스트 김' 정권에 의한 북한체제의 회생 가능성이나 장기 전망을 추론하기는 힘들다.

(2) 급변사태

급변사태에 의한 체제 붕괴 우려는 거의 없다. 급변사태는 북한 통치세력이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고 관리할 수 없는 거의 통제불능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한·미·중 3국은 전략대회를 통해 북한 급변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핵,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통제 방안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은 대량탈북사태에 대한 인도적 처리 방안을 협의하길 원한다.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 주도의 북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한·미·중 3국의 협의와 충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나, 급변사태 발생 우려는 논란의 여지가 크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도 그러한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급변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 우선 북한 내부의 위기와 혼란으로 인한 통제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면 북한 통치세력이 중국을 불러들일 개연성이 높고, 그 결과 통제 회복 후 북한 정권은 중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의 통제불능 상황은 일부 군부 세력에 의한 무력도발과 맹목적 모험심을 자극하여 자칫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북한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 이외의 방안을 찾기 힘들다. 남북경협이 북한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무시할 수 없으나,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북한의 위기 상황을 통제·관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3) 연착륙

북한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군정치체제를 포기하고 북한 통치세력 스스로 본격적인 개혁·개방 결단을 내린다면 북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유보될 수 있다. 이는 일인독재체제가 아닌 당중심체제로 전환되어 중국식 개혁·개방 방식을 전망하는 입장으로, 정치적 일당독재 아래 시장경제체제

로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 회복과 함께 낮은 수준의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는 시나리오이다.

세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인 담보상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중국이 개방을 쉽게 단행할 수 있었던 조건과는 달리, 남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북한이 개방의 딜레마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남북한은 서로의 분신이자 ‘아바타’와 같은 존재로,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긍정하고 선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북한 통치층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스트 김’ 정권은 통치자원 확보 차원에서 남한의 대북지원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완전 단절할 수 없으며, 김정일 없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기대는 한층 증폭될 것이다. 후계정권은 주민들의 물질 및 정보 차원에서 대남 의존도를 통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며 심지어 통치세력 내부에서조차 사적·비공식적으로 남한과의 연고를 가지려는 경향이 증대하면서 중국에의 의존보다 남한과의 연대를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이 경우 ‘포스트 김’ 정권은 북한 내부 통치층의 구심력 해체와 이반 그리고 국가통제체제의 포섭망에서 벗어나면서 시장 의존적인 주민층의 증대 현상을 막기 어렵다. 이는 역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필연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건강 문제, 후계구도의 불확실성, 거듭된 경제 실패로 인한 경제 희생의 전망 부재 등 북한체제의 한계 상황 등은 남북관계에서 종래의 접근을 재점검하게 한다.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 전망은 불확실하다. 김일성 생전에 김정일은 김일성을 제치고 실제 국정 모든 부분에서 실권을 장악한 상태였다. 여기에다 당시 냉전체제 아래서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나 경제적 어려움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주민들의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며, 북한 내부 상황도 크게 변했다.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체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점점 더 과감하게 바깥 정보를 얻고 있다.¹⁴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 세습후계자 지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

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통치세력 내부에서도 소극적 거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반정부 움직임으로 당장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계자 정권이 경제 회복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힘든 조건에서 체제 이반 현상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을 끈다.

북한은 개인과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배급제의 전면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 조직에 기반을 둔 전체주의적 침투와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 과거에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과 억압’의 이원적 통치체계가 작동하면서 당의 사상 사업을 통한 조직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현재 북한은 당 기구가 약화되었고 ‘분권화된 약탈 구조’ 속에 폭력과 테러를 통한 억압적 통제로만 유지되고 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온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특권층과 통치엘리트들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 수령통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 통치엘리트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체제 결속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의 길에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탈출구’(Exit)와 함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2.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한반도 평화는 안정적인 새로운 분단 구조의 형성이 아닌, 통일을 향한 길을 여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근본적인 한계는 북한체제의 모순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국가체제의 민주적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오직 총대에 의해

¹⁴-Marcus Noland, “They’re Not Brainwashed, They’re Just Miserable”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0/03/30>>.

¹⁵-조민·박형중·전봉근·이수석, 『통일대계 탐색연구』, pp. 125~129.

서만 지켜진다”라는 북한의 ‘선군평화론’과 “민주국가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과의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다.¹⁶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기 전부터 평화체제의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남북불가침’ 합의 이후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자회담을 제의(1996.4.6)하였고, 6차례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최근 비핵화 문제와 6자회담 담보상태에서 북한은 다시 평화협정 문제를 주장하여,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구도로 협상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를 전제로 평화협정을 통한 북한체제의 국제법적 보장을 토대로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대내외적 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선군평화의 논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의 해결도 요원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도 무의미할 수 있다.¹⁷ 흥미로운 점은 최근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도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북미 수교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개방 압력을 예상하고 있으며, 더욱이 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평화협정 논의는 북한의 전략적 입장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고,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 남남갈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지만 이를 소극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이미 2005년의 ‘9·19 공동선언’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

16_조민,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전망』 (서울: 나남, 2007), pp. 121~164.

17_조성렬,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략,”; 박종철, “비핵화와 평화구상에 대한 한국의 전략,”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0 제1차 정책토론회자료집, 2010.03.30).

질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북핵의 현실적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협정 논의와 4자 간 ‘별도 포럼’을 통해 북핵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한편,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통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와 추진 방향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안보 사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경협 사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에 ‘헬싱키 협정’(유럽안보협력회의의 최종 의정서, 헬싱키 1975년) 모델을 원용할 수 있다. 헬싱키 협정의 안보, 인권, 경협, 세 바스켓 가운데 특히, 경협 분야에 대한 협상 내용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권 의제는 북한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나, 인류 보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관련된 ‘경제, 과학기술, 환경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산업 협력과 공익 사업을 비롯하여, 농업·에너지·컴퓨터 및 IT 분야, 의학과 공중 위생, 환경연구 및 공동조사, 관광의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미국과 중국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한국의 이니셔티브와 대안 제시에 달려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접근 원칙은 통일을 향한 ‘전략적 목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즉, ‘평화인가, 통일인가’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런 점에서 ‘선 평화, 후 통일’의 기조가 지속되었다.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한반도의 분단국가 존립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평화체제는 궁극적인 목표일 수 없으며,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요컨대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며,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를 신조로 삼아야 한다.

3.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통일 비용은 체제통합 비용으로,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형의 경제적 통일비용은 위기관리 비용, 경제재건 비용, 제도통합 비용, 사회보장 비용 부문으로 구성된다.¹⁸ 이는 크게 소멸성 지출과 투자성 지출로 나뉜다.¹⁹ 그러나 유·무형의 분단 비용 해소와 함께 통일이 가져다 주는 미래재의 가치를 포함한 이른바 ‘통일 편익’(Benefit)이 통일 비용(Cost)을 훨씬 능가한다. 즉,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크다.²⁰ 그럼에도 통일 비용 문제는 통일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반통일 논리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독일 통일의 감동과 흥분이 가시자 곧 독일의 통일 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막연한 기대를 넘어 통일 문제를 ‘타산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통일 비용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단순히 “남한이 못하는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을 불러 일으켜 통일을 주저하는 분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후 평화와 교류협력 분위기에 가려 통일 논의가 실종되면서 통일 비용 문제도 더 이상 관심을 끌 수 없었다. 그럼에도 통일과 관련된 통일 비용은 국민 대중 사이에서 ‘통일기피증’ 또는 ‘통일유예론’을 확산시키는 논리로 작용하였다.²¹

독일의 통일 비용으로 인한 후유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독일 연방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991~2003년간 통일 비용은 1조 2,800억 유로(1990~2005, 약 1조 4천억 유로)였다. 통일 비용으로 한 해 평균 1,000억

18-민족통일연구원, 『통일비용연구(Ⅰ)』(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19-김영윤,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본 독일통일,”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서울: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7.6.5), pp. 6~11.

20-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2010년 제8회 JPI 정책포럼(제주평화연구원, 2010.3.29), 참조.

21-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화비용’이라 할 수 있다. 평화비용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의 총칭으로 규정된다. 김영윤·이석·손기웅·조민·서재진·최수영,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서울: 통일연구원, 2005.10), 참조.

유로 정도 부담한 셈이나,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 지출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2003년도 통일 비용의 경우 투자성 지출(37.2%)에 비해 소비성 지출(62.8%)로 거의 2배 가까이 지출되었다. 그럼에도 통일 당시(1989) 동독의 1인당 GDP 수준은 서독의 1/3 수준이었으나, 동서독 통합 20년이 지난 현재 동독 지역의 경제는 서독의 70% 수준으로 향상되었다.²²

통일 편익은 통일 효과로 인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이익으로,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새로운 유·무형(Tangibles/Intangibles)의 이익을 창출한다. 통일은 우선 분단의 폐해 즉, 군비 지출과 안보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분단 비용을 해소시킨다. 통일 비용은 한시적 지출이나, 이는 소모성 지출이 아닌 미래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성 지출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ll \text{통일 편익} = \text{분단 비용} - \text{통일 비용} + \text{미래재의 가치} \gg$, ($\text{분단 비용} > \text{통일 비용}$)로 등식화할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통일 비용 산출 내역이 제시되었다. 실질적인 통일 비용은 통일 상황과 통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통일 준비를 위해 통일 비용 조달 역량과 해결 방식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 비용 부담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주변 4강에게 특히, 북한 지역 안정화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통일 비용 마련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면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 이에 통일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대안으로, ① 통일 전 북한 개발협력, ② 통일기금 확보 및 통일세 징수, ③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특별 자치지역 설정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통일 비용 해소 방안

첫째, 북한 개발협력은 통일 비용을 줄이는 첩경이다. 대북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다변적

²²-국가정보원(NIS),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 (2009), pp. 177~178.

인 지원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제안·추진, △특구 개발협력, SOC 구축 등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위한 제도화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 편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협력은 궁극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사회보장 비용과 같은 소멸성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투자성 비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경협과 대북개발협력은 통일을 향한 미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기금 확보와 함께 통일세를 거둬야 한다. 우선 정부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확대 편성하여 통일기금 확보에 충당하거나, 별도 통일기금법을 제정하여 통일기금을 확보·적립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나, 민족공동체 회복이 통일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별도의 통일기금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편성으로 통일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일세는 반드시 신설될 필요가 있다. 통일세는 목적세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세 징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하나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일정비의 담세를 부가하는 독일식 방법이 있다.²³ 이 경우 조세 정의에 부합되게 저소득층은 면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술·담배, 복권, 유류세 등 간접세 방식의 징수도 병행되어야 한다. 통일세 세율과 직간접 방식에 의한 징수 총액은 통일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요 비용에 따라 조절

²³ 독일의 경우 통일세는 처음 1991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의 소득세 혹은 법인의 법인세의 7.5%가 징수되었다. 그 후 1995년 재도입되었고 1998년부터는 개인의 소득세 혹은 법인의 법인세의 5.5% 수준이었으며, 이 시기의 통일세는 연평균 국가 세수입의 6%를 차지했다. 통일세는 재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통일세는 수입이 많은 사람들과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가 없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공무원과 자영업자)의 재정보충 부담을 높였다. 통일세는 2019년까지 지속될 것이나, 점차 통일세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olf H. Hasse, Hermann Schneider, Klaus Weigelt(Hrsg.), 『사회적 시장경제-독일경제정책 A에서 Z까지』, pp. 397~399.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지역을 일정 기간 ‘특별자치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이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 체제통합을 즉각 추진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 완전한 체제통합에 이르기 전 단계에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통일 비용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중국-홍콩의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홍콩의 체제와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 방식으로, 동서독식 흡수통일의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였다.²⁴ 이 경우 통일 비용의 소요 대상과 내용을 조정하면서 장기적인 발전 구상 속에 접근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을 특별자치지역으로 설정하고, 통일 5년 후 북한 주민 생활 수준의 목표치를 1/10로 잡고, 10년 후 50% 달성을 목표로 삼아 우리의 경제 역량에 부합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통일 비용 조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 비용 문제가 통일의 발목을 잡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독일은 이미 통일 비용의 부담을 털고, 통일 효과를 발판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는 GDP 세계 4위, 수출입 규모 세계 2위, 연간 개발원조액 세계 2위, 광범한 사회보장국가로 유럽연합(EU)의 주도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 지역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포섭함으로써 한국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²⁴ 평화재단, “바람직한 통일의 비전과 방식,”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 화해상생 통일론』, (2009 평화재단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09.11.17), pp. 58~61.

V. 통일코리아 모색

1. 통일대계 수립

대북정책의 목표인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대계 수립이 필요하다. 통일대계 수립으로 통일정책의 추진 방향, 추진 전략, 정책 과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통일대계는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과제를 범주화하고 체계화시킨 청사진이다.

통일대계는 △통일철학, △통일비전 및 필요성, △통일 방안 및 통일 프로세스, △통일 전략, △통일국가의 체제, △통일 비용, △통일 후 국민 통합 방안, △통일코리아의 미래상 등을 담아야 한다. 특히 통일코리아가 추구하는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 등을 확립하는 동시에, 법적·제도적 통일의 목표 지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정책은 이러한 통일대계를 지침으로 삼아 각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업으로 제시된다. 통일대계는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통일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북한 개방화 및 시장화

통일을 위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시장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 속도와 폭은 북한 당국도 전망하기 힘들다. 개혁·개방 정책은 인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회복과 인민생활의 향상으로 시장의 확대, 외부 정보의 유입, 자각적이고 스스로 경제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중산층의 성장 등이 통치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언제든지 개혁·개방 정책은 포기하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 정책의 목적은 체제 유지의 득실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불가역적 국면에 이르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경협과 더불어, 개방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특구 방식의 개방정책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는 ‘북한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해야 하며, 북한문제는 통일의 전망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통일 ⇒ 북한문제 ⇒ 북핵문제). 북핵 문제가 북한문제 속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제안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등 긴급한 안보 현안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핵문제가 북한체제 문제와 결부된 ‘북한문제’라는 측면을 도외시켰다. 1999년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개혁 정책 문제를 검토했으나 핵, 미사일 폐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대북정책 대안에서 ‘북한개혁’ 정책을 탈락시켰다. 그 후 북한 핵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 개방화는 통일 및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사안이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물론 한국도 비핵화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개방화와 시장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 개방과 시장화는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을 비롯하여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한국 주도의 북한 개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SOC 개발 사업, 산업체제 복구, 에너지 공동연구 및 개발 사업, ‘녹색 한반도’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²⁵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되, 실질적으로는 남북한 물질·인적 교류를 본격화하는 대북 개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북한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문제를 통일의 전망 위에서 개방화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 개혁의 지름길이자, 통일로 이끄는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한 교류협

²⁵-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10·4 선언’의 합의 사항이 이행·실천되었다면 남북관계와 민족 미래의 방향은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다.

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요구된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최소한 몇 차례 개최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되어야 하며, 이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통일을 위해 북한 통치 엘리트층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북한 통치 엘리트층은 통일을 결사코 반대한다. 통치 엘리트층은 통일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이들의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코리아에서 그들의 존재와 역할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와 달리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통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 방안으로 통일코리아는 중앙(연방)정부의 지도 아래 다양한 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치·자율의 원칙 위에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준)연방제 통일 방식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작은 북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이탈주민이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새로운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능적 통합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기반을 둔 (신)기능주의적 통합 논리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 논리 앞에 무력했으며, 남북 간 국가 중심 논리의 벽을 뚫지 못했다. 서구 유럽 사회에서 통합 논리로 작용했던 기능주의는 서구 사회의 공통적 삶의 양식, 가치, 이념, 종교, 문화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²⁶ 남북관계에서 21세기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인 자유, 시장경제, 인권, 민주주의 등의 이념과 체제(제도) 문제를 유보·배제해 왔음에도 북한의 제도와 이념의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남북화해협력의 진전과 북한의 개혁·개방 기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합 당위성의 근거로서 ‘민족’의 개념과 실체에 대해 남북한 간

²⁶ 오병현, 『평화통일은 가능한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pp. 81~93.

합의 도출도 어려운 현실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족 이외의 공통의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당장 북한이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통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실질적 통일 추구하고 더불어 법적·제도적 통일의 병행 접근이 중요하다.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은 저준위 정치(Low Politics) 과정의 축적을 통해 고준위 정치(High Politics)로 나아간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남북관계에서 이러한 순차적 접근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비효율적이었다. 기능적 통합론에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론은 교류협력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으며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이었다. 그러나 제도적 통합 문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하지만, 북한 스스로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한 개혁과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하는 개방을 택해야 한다. ‘포스트 김’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연속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겠지만, 점차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민족공동체’ 관념 속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북한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통합인 통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준)연방제 통일 방안

통일은 ‘평화, 민주주의, 지역균열 구조 해소’를 위한 국가 개조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준)연방제 통일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²⁷

²⁷ 북한의 연방제는 초기 통일전선 전략 차원에서 제안되었으나 점차 체제 보존의 논리로 변화되면서, ‘반통일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일성은 이미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통일론’을 적극 반대하여 통일은 후대의 몫으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권과 군사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한 이른바 ‘느슨한 연방제’(1991년 신년사)를 제안하였고, 이것이 남북공동선언(2000.6.15)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타났다. 김일성, <신년사>(1991.1.1), 《김일성저작집》 43, 1996; 김일성, <일본 마이니찌 신문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1.4.19), 《김일성저작집》 43, 1996; 김일성, <민족올림픽위원회협회 위원장인 메히꼬 출판회사 위원장 겸 사장 일행과의 대화>(1991.6.25), 《김일성저작집》 43, 1996.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더 이상

연방주의(Federalism)는 21세기 국가 유형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다원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로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준)연방제 디자인은 통일코리아가 대략 13개의 지역(지방)정부를 포괄하는 연방제 국가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어느 면에서 연방제는 지방자치제 또는 지방분권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 연방제와 민주주의: 연방제는 지방정부의 자치(Regional Self-Rule)와, 단일 정치시스템 내에서 중앙정부의 공치(Shared-Rule)와의 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지역적 자치 및 공치“(Regional Self-Rule Plus Shared-Rule)의 원리를 말한다. 연방제는 민주주의와 세계화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제도이다.²⁸
- 연방제와 평화: 분권과 자치 이념이 구현되는 국가 유형인 연방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관계에서의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 국제기구, 지방정부 대 기업’ 등 복잡다기한 상호 협력적 관계망의 확대를 통해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연방제는 국내적 차원에서나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구현하는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²⁹

나. 코리아연방공화국(Republic of Federal Korea)

: ‘평화/민주주의/지역주권’ 이념의 구현

남북 간 합의통일의 구체적 방안은 두 갈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북한 지역의 자치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으로, ‘북한 자치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남북한 통합군대를 발족시키면서 정치개혁을 통해 체제전환

통일 방안으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²⁸-Michael Burgess, *Comparative Federalism: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2006), pp. 251~268.

²⁹-Daniel J. Elazar, *Federalism and the Way to Peace*, Reflections Paper No. 13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Canada K7L 3N6, pp. 1~16.

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남한 당국은 북한 자치 정부의 정치개혁을 위해 특정한 가이드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북한 자치 정부는 외교권을 남한 정부에 점차적으로 이양하면서 통합을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 이는 북한 지역 전체를 하나의 통합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자칫 북한 자치 정부가 남한 당국에 대해 북한 전체의 요구를 대변함으로써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연방제 통일 방식을 추진할 경우 남한 정부가 사실상 중앙(연방)정부의 실체를 구성하고 남북한 몇 개의 지역(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통일코리아는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분권’의 이념에 기반하여 각 지방정부의 ‘지역주권’이 보장되는 (준)연방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 연방제 통일에 의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하나의 중앙정부와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될 수 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지리적, 문화전통적, 교통권 및 경제권을 기준으로 대략 8도 내지 13도(남한 8도, 북한 5도)의 지방정부로 구성될 수 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남한의 다수 지방정부를 비롯한 북한 여러 지역의 자치와 지방주권을 보장하는 국가체제이다. 통일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 전체를 하나의 정치체(Polity)로 끌어안는 통합 방식은 부담이 크며 또 다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예멘의 통합 사례가 여실히 증명한다. 더욱이 남한의 과도한 주도 방식은 엄청난 부담과 함께 북한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기 쉽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방향 위에서 각 지방정부의 이념적 포용성과 시장경제로의 전환 수준을 그들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 한반도 전역의 연방제 통일로 북한 각 지역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앙중부 중심·주도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북한 지역 전체의 민주적 자치·자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의 헌법체제 아래 북한 지방정부의 헌법체제를 통해 다당제를 도입시킴으로써 북한 민주주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지역 주민의 자치·자율을 존중·보장하는 헌법적 계약 위에서 지역적 다원주의의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고, 지역 전통의 존중, 지역적 생활정치 영역 보장·확대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준)연방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역균열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 연방제는 민주적 구조 속의 정치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균열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가체제의 재구조화 또는 국가체제 개조의 역사적 계기다. 통일코리아는 대략 8개~13개 정도의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연방제 국가체제가 바람직하다.³⁰

‘광역경제권’과 한국형 연방제

우리 정부는 최근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³¹ 광역권이란 개별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간적 단위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괄한다. 인구 5백만 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5백만 명 미만의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뉘 각 권역별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분권, 특화, 상생의 원칙하에 ‘5+2 광역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광역발전 프로그램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전략으로 추구되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또는 세계적 추세인 지방주권에 기반을 둔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거의 없다.

광역경제권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국을 광역화된 공간적 단위로 구분한 접근은 연방제적 발상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역

30-조영기·정낙근, “새로운 통일장안의 모색 : 『선진화 통일방안』, 『이제는 통일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9.11.5), pp. 47~50.

31-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인력·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2008.9.9;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광역경제권별 선도 산업 발전비전 제시” 2008.9.10, 참조.

화된 공간 개념을 한층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국을 인구 규모로 구분한 '5+2' 방식을 준용하면서, 지리, 문화전통, 교통권 및 경제권을 기준으로 공간적=지역적 단위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단위에 중앙 정부의 권력을 대폭 이양(Devolution)함으로써 지방주권을 향유하는 차원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한국형 연방제를 추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VI. 통일로 가는 길

1. 북한 동포에 대한 무한책임

북한 동포에 대한 무한책임이 절실하다. 북한 동포는 20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백 년 이상 빈곤과 억압의 굴레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없었다. 자유와 인권, 빈곤 해방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백 년 동안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우리 남한 이외에 누가 북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체제 유지만이 최고의 국가목표인 북한 통치 세력에게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문제는 적극적인 관심 사안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민족의 미래 앞에서 북한의 극소수 특권층의 입장을 변호할 수는 없다. 우리 시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존재 양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통일은 북한 동포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통일은 절실하고, 그야말로 아주 절박한 과업이다.

‘분단과 분열’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한 민족, 두 국가’라는 민족 분단은 65년 째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한 국가, 두 국민’ 상태를 30여 년 이상 겪고 있다. 남북한 분단 상황에도 ‘한 국가, 두 국민’의 분열 상태가 구조화되어 국론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

역주의를 극복하고 이념 갈등을 해소하면서 민족 미래를 향한 통일 논의와 준비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통일 대비를 위해 국민통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양극화 해소가 급선무로, 중산층의 하향 몰락을 방지하고 ‘동반성장’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누구도 배제·소외되지 않고 모든 계층이 함께 미래를 열어 나간다는 확신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달려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미래와 통일을 향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2012년~2013년 이후 산업화 세력은 60대 이상 연령층이 되며, 민주화 세력은 40~50대 연령층으로 한국 사회의 주도층이 된다. 여기에 20~30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혜 세대이지만, 산업화·민주화 세대와는 달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불안정한 상황에서 당혹해 하고 있다. 이들 모두 미래를 향한 통일의 길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통합 리더십에는 동반성장의 가치체계 아래, ‘우리 함께 가자!’는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메시지를 고대하고 있다. 민족공동체가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 관념만으로 부족하며, 자유와 형평성에 기반을 둔 사회정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남보다 앞서 나간다”는 의미의 선진화(先進化)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나아간다”는 선진화(善進化)가 보다 바람직하다. 깨끗하고 비전 있는 보수, 합리적이고 유능한 진보가 기대된다.³²

2. 통일코리아: 평화와 선린의 강중국(強中國)

통일코리아는 인구 8천만을 내다보면서 견실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해양경제와 대륙경제를 잇는 ‘지경학적 허브’(Geo-Economic Hub)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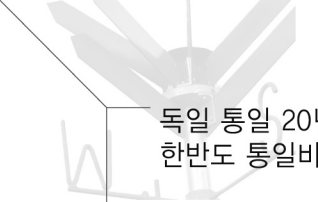
³²–감상적이고 맹목적인 대북 포용은 북한 주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통치층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통치층과 군의 결집 등 대내적 통합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도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안보와 국방 태세를 면밀히 재점검하는 한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응징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균통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바, 군의 민간으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통일코리아는 국력 차원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수준의 강중국(Advanced Middle Power)으로 부상하면서 평화와 선린의 기치를 내세우는 ‘평화·선린 강중국’으로 발돋움 한다. 강중국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국제적 위상을 달리하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의 강소국의 국제적 역할 및 위상과도 구별된다. 일본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나,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지 못한다면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힘들다. 중국은 넓은 영토와 14억 인구로 미국과 함께 G2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국가이지만 향후 경제 발전은 정치사회적 내부 문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국내정치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발전 양식과 방향은 광범한 제3세계 모델로 부각되기는 어렵다.

서구의 강중국은 경제력 차원에서 세계 경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며, 외교군사력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수립할 수준은 아니나 지역 강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코리아는 서구의 중강국들과는 달리, 세계적 경제·군사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문명의 중재자와 균형자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한 위상 유지를 위해 통일코리아도 적정 수준의 세계 전략(Semi-Global Strategy)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21세기 세계 속에서 ‘코리아 스탠더드’가 특정한 부문의 규준이 될 수 있으며, 서울이 세계의 표준으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 2020년을 한반도 통일 원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한국은 2020년의 세계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포스트 김’ 시대의 북한 변화를 한민족 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통일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전략 문제로, 한국 경제의 활로 개척과 함께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과업이다. 이제 ‘기다리는 통일’ 보다는 ‘다가가는 통일’이 필요하다. ‘떠맡는 통일’ 보다는 ‘끌어안는 통일’이 기대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통일리더십이 절실히 요망된다. 평화와 통일은 만들어 가야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들이닥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반드시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갖춘 정치적 리더십이야말로 통일과업에 결정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한민족=한겨레의 역사와 영혼을 끌어안는 ‘혼’(魂)이 담긴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빈번한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구한말 외세 침략과 일본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 민족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조소적인 경구를 통해 미·소가 대결하는 냉전체제하에서 분단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분단 60년 후 한국은 약소국 상태를 벗어나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하려는 중견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도발적인 행태를 보이며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남북한은 외세가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며, 남북통일은 오히려 동북아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예멘·독일은 한민족과 같이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민족분단을 겪었다. 그러나 세 나라는 통일되었지만 남북한은 아직까지 대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은 1975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무력통일이 달성된 후 주변국들과 전쟁에 돌입하였다. 독일과 예멘은 세계적인 탈냉전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1990년 통일을 선포하였다.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통일한 독일 통일은 유럽통합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의 촉매가 되었다. 남북예멘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통일하였으나 걸프전 이후 악화된 국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재분단 위기를 겪고 1994년 무력으로 통일을 완결지었다. 상이한 통일 방식과 각기 다른 국력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들 세 나라의 통합 사례는 한반도 통일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베트남·예멘·독일 세 나라의 통합 사례를 경험적 준거 틀로 삼아 한반도 통일 유형을 논의하고, 통일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소련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냉전 구조가 해체된 상황에서 베트남식 이념 대립에 의한 무력통일은 남북한이 추구할 가치가 없으며, 경제력이 취약하고 부족한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는 예멘의 통일 사례는 한반도 통일에 제한적인 시사점만을 제공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세계사적 대세로 정착된 시대적 현실과 세계 경제력 평가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통일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독일 통일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가장 많다.

II. 분단국 통일이 국제질서에 주는 영향

분단체제는 일반적으로 외세의 개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족 내부의 갈등이 국제적 요인과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형성·유지되었다. 통일 과정도 외세의 영향력을 받으며 전개된다. 그런데 베트남·예멘·독일의 통합 사례는 분단국 통일 과정이 단순히 국제적 영향력에 좌우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며,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예멘·독일은 각기 지정학적 위치, 분단의 역사적 배경, 분단체제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통일 과정 또한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더욱 부각된다. 여기서는 세 나라의 통일 방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통일 유형을 ① 강제력을 사용한 무력통일, ② 남북한의 협상을 통한 합의통일, ③ 북한의 급속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통일 방식에 따른 국제적 충격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무력통일과 주변국과의 갈등 확대: 베트남 사례

베트남 분단은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통치를 겪는 가운데 민족주의자들이 좌·우익으로 분열된 데 기인한다. 1940년 일본군이 베트남을 침공한 후 항일운동을 통하여 북부 지역을 장악한 공산주의 세력은 1945년 9월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월맹) 수립을 선언하였다. 한편, 남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1949년 바오다이 왕국을 설립하였으나, 1954년 대통령을 선출하고 베트남공화국(월남)을 수립하였다. 그 후 베트남의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은 내전을 겪으며 분단체제를 고착시켰다.¹

미국은 1955년 9월 동남아조약기구의 창설과 더불어 월남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월남군을 훈련시켰다. 월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 전역으로 공산주의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1961년부터 월남에 대한 군사·경제원조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월남 내부에서 정치적 혼란이 악순환되는 가운데 베트콩이 농촌 지역에서 세력 기반을 확대하였다. 베트남 전쟁이 소모전으로 장기화되자 미국 내에서는 반전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73년 1월 월맹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였다.² 하지만 월맹은 휴전협정 체결에도 남북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여 1975년 4월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전쟁에 승리한 월맹은 1976년 7월 2일 통일을 공식 선언하고 국명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전쟁을 통하여 통일된 베트남은 남북 지역 간의 정치적 통합이 완성되어 가자 주변 국가들과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1977년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캄보디아와 국경분쟁을 겪었다. 1979년 2월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해 폴 포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베트남 정권을 수립하였다.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을 응징하기

¹-베트남 분단과 통일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영희, 『베트남 전쟁: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서울: 두레, 1985) 참조.

²-국토통일원, 『월남협상사례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8) 참조.

위해 중국군이 베트남 영토를 침략하였으나 패배하여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무력통일을 달성한 베트남은 통일 후 5년간 주변 국가와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³

베트남식 비인도적인 무력통일은 우리가 회피하고자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동북아 4국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또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원하지 않고 있다.⁴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이 자국에 대량 난민을 유입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전쟁이 서방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일·중·러 4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이해관계를 일치하고 있는 바, 남북한 통일이 전쟁을 통해 달성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 불완전한 합의통일과 외세의 영향력: 예멘 사례

남북예멘 분단도 외세 식민통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은 1839년 남예멘 지역을 점령하여 인도양 진출의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오토만 터키의 지배하에 있던 북예멘 지역에서는 1918년 회교군주국이 수립되었으나, 군사혁명을 통하여 1962년 예멘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북예멘 공화국이 수립된 후 남예멘 지역에서는 좌익 게릴라 세력이 영국군과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1967년 남예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남북예멘은 이념 대립에 의한 분단체제를 형성하였다.⁵

3. 최청호, “캄푸치아 분쟁의 원인과 경과,” 강태훈 외 공저,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99~130 참조.

4. 배정호 외, 『동북아시아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참조.

분단체제가 고착된 후 정통 회교국가인 북예멘과 사회주의 국가인 남예멘은 20여 년간의 전쟁과 통일 협상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남북예멘 국경 지역에 석유가 발견되자 통일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8년 5월 남북예멘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국경지대의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합의하였다.⁵ 한편, 1989년 초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남예멘 정부에게 개혁 실시를 요구하며 경제 및 군사 원조를 감축하였다. 소련의 원조가 줄어들자 남예멘은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국제 환경이 변하고 남예멘이 체제전환을 추구하자 통일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이에 남북예멘 정상은 1989년 11월 회담을 개최하고 통일을 논의하였다. 이후 일련의 후속 회담을 통해 통일 협상은 급진전되었고, 1990년 5월 22일 통일을 공식 선포하였다.

예멘 통합 방식은 남북예멘 정부를 일대일의 동등한 비중을 주고 통합한 것으로 대등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 인구가 북예멘의 1/4 밖에 안 되는 남예멘 측은 대등통합 방식을 택함에 따라 통일에 적극 협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정부조직을 기계적으로 합병함으로써 통일 정부의 조직은 비대화되는 한편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특히 군·경찰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구들이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여 정치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통일 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 없었다.

통일 직후 예멘인들은 석유를 개발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 분위기는 1990년 8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무산되었다. 전쟁에 패배한 이라크는 경제난으로 예멘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미국 등은 예멘 정부가 연합군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적 지원을 철회하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예멘인 근로자

5- 예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6- 국토통일원, 『예멘 통일관계 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0), pp. 216~218 참조.

7-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서울: 국민대출판부, 2000), 참조.

약 100만 명을 강제 귀환시켰다. 해외 근로자들의 귀환으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통일 예멘의 정치·사회적 갈등은 증폭되었다.⁸

1993년 4월 예멘 통일 후 첫 총선이 실시되었다. 개표 결과 총 득표수는 국민회의 85만 표, 예멘사회당 65만 표, 이슬람개혁당 50만 표 정도에 이르렀다.⁹ 선거 결과는 예멘사회당이 통일 후 3년간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속에 남예멘 주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회복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남예멘 주민이 전체 인구의 1/5 밖에 안 되었으므로 총 득표율은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총선 후 신정부의 권력 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해 남북예멘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 대립이 커지면서 예멘 정국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회의는 대통령평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예멘사회당은 개헌보다는 부패 척결 등 정부 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예멘의 지도층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자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양측 군부 또한 상호 불신을 표출하였다.¹⁰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으로 통일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한편, 통일이예멘의 민주화가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자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예멘 지도층에 호의를 보이며 은근히 분열을 조장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의심한 살레 대통령은 1994년 5월 북예멘군으로 하여금 남예멘 지역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2개월간의 전면적인 내전을 겪고 7월 7일 북예멘군은 남예멘 수도 아덴을 함락하였다.

내전을 겪은 후 예멘 정부는 IMF의 지원을 받아 정부 개혁을 실시하고 경제 긴축정책을 추진하였다.¹¹ 이와 같은 개혁정책에 힘입어 예멘 경

8-Siobhan Hall, *Yemen: The Politics of Unity* (London: Gulf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Gulf Report Special Issue, October 1991), pp. 10~16.

9-예멘의 통일 합의는 북예멘 집권당 국민회의와 남예멘의 예멘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체결했다. 통일 후 북예멘 보수주의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적 지원과 모슬렘 형제당의 후원을 받아 1991년 1월 이슬람개혁당을 설립하였다.

10-유지호, 『예멘의 남북통일: 평화통일의 매력과 위협성』 (서울: 서문당, 1997), pp. 275~324 참조.

제는 1995년~2000년 연평균 6.4%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력이 취약한 통일 예멘은 중동 지역 전반에 걸쳐 확산된 회교 원리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예멘 정국불안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예멘 통일 사례는 경제력 등 국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졸속하게 달성된 합일통일이 외세의 부정적인 영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외관계에서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분단국은 통일 이후에도 국제적 역학관계에 시달리게 된다. 통일 이후 경제·사회적 통합은 국제 환경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영향을 받으며 성숙되어 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는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평화적 흡수통일과 지역통합 촉진: 독일 사례

1945년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4개국 군대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1949년 미국·영국·프랑스 점령하에 있던 서부 지역은 독일연방공화국, 소련의 통치하에 있던 동부 지역은 독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분단체제가 고착된 후 동서독은 당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던 냉전 기류에 편승하여 대립된 관계를 유지하였다.¹²

1969년 사회 민주당 브란트 수상이 취임한 이후 서독 정부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¹³ 그 후 서독은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그러나 서독이

¹¹-Sheila Carapico, *Civil Society in Yemen: The political economy of activism in modern Arab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58.

¹²-백경남,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서울: 도서출판 강천, 1991), 참조.

¹³-이영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서울형상사, 1990), pp. 15~39 참조.

장기간 추진해온 교류·협력정책과 실질적 통일 사이에는 불연속적인 면이 있다. 통일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소련 및 동유럽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독일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히 이루어졌다.¹⁴

1989년 5월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이 개방되자 동독체제에 염증을 느낀 많은 동독인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이와 함께 동독 내에서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민주화 운동으로 혼란을 겪는 와중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는 급격히 와해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던 4대 전승국은 1990년 1월 워싱턴회담에서 2+4 회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동서독은 통일의 내부적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고, 4대 전승국은 동서독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90년 5월 개최된 제1차 2+4 회담에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통일 독일의 군사적 위상 설정 문제였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은 통일 독일의 NATO 잔류를 당연시한 반면, 소련은 동독의 상실로 인한 전략적 지위 약화를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1990년 6월 제2차 2+4 회담에서도 통일 독일의 NATO 잔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서독 콜 수상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련을 설득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자간 협상을 주도적으로 활용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1990년 6월 EC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경제지원을 약속하였고, 7월 NATO 정상회담에서 선제무력 불사용 등을 선언하여 소련이 통일 독일의 NATO 잔류를 승인하도록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2+4 회담은 독일 민족의

14_박성조·양성철 공저,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3~14 참조.

자결권을 확인하고 전승국 권리의 전면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독일 통일
의 외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였다. 제4차 2+4 회담에서 체결한 ‘독일에 관
한 최종합의 조약’은 전문에서 통일과 함께 전승 4국의 권리와 의무가 해
지된다고 밝혔다. 본문에서는 통일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 확정, 통일 독
일의 화생방 무기 생산·보유·사용 포기, 3년~4년 이내에 독일군 병력
37만 명 감축, 1994년 말까지 소련군 철수 완료와 관련된 조약 체결, 통
일 독일의 NATO 잔류 인정 등을 명시하였다.¹⁵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선포하였다. 서독은 동독을 흡수 통일
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적대적인 역사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
고, 통일 독일이 주변국들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였다.¹⁶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경제대국인 서독이 동
독을 흡수 통일한 사건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촉진시켰
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독
일 통일이 주는 영향은 동구 사회주의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독일 통일은
서유럽 국가들의 정치통합을 촉진하여 1991년 12월 EC 정상들이 마스트
리히트에서 회담을 갖고 유럽합중국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유
럽동맹조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탈냉전 이후 현재 통일 독일은 미국과 협
력하며 세계질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

베트남·예멘·독일의 통일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통일 방식과
통일국가의 국력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 당시 베트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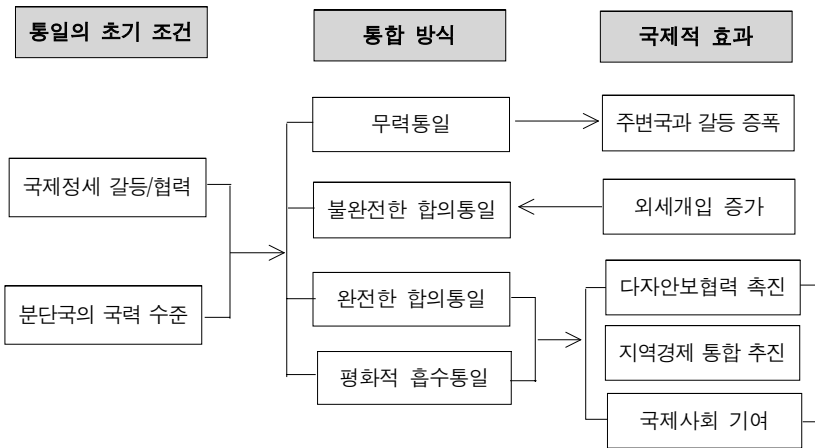
15-Philip Zelikow, 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필립 젤리코·콘돌리자 라이스 지음, 김태현·유복근 옮김, 『독일통일과 유럽의 변환』 (서울: 모음북스, 2008), pp. 390~482 참조.

16-서병철, “통일독일의 대외정책,” 유임수 외 공저, 『베를린 시대의 독일공화국』 (서울: 엠에드, 2001), pp. 77~130 참조.

경제력은 낙후된 저개발국가 수준이었고, 예멘은 베트남보다도 경제력이 더욱 취약하였다.¹⁷ 베트남·예멘과 대조적으로 서독은 선진 경제대국이였다.

세 나라가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더불어 무력·합의·흡수 등 통일 방식의 차이가 지역 세력 판도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었다. 베트남의 무력통일은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을 일으킨 반면, 독일의 평화적 흡수통일은 지역통합을 촉진시켰다. 베트남과 독일의 경험은 분단국 통일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합의통일을 거쳐 무력대결로 통일을 완결지은 예멘의 통일 사례는 경제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졸속하게 달성된 통일이 외세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노출되어 정치적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세 나라의 시사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분단국 통일이 국제질서에 주는 영향



¹⁷ 예멘은 사막 등 불모지가 많아 전국토의 15% 정도 경작이 가능하며 식량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통일 직전 1988년 북예멘의 1인당 GNP는 약 650달러, 남예멘은 약 500달러에 달했다.

도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북한의 국력 수준과 동북아의 갈등·협력 실태는 통일의 초기 조건이다.

미·일·중·러 4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통일 환경은 남북 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다. 역내 경제적 상호 의존성 심화는 통일 기반 조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분단국 통일에 작용하는 영향 및 통일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국력 수준에 따라 상대적이다. 특히 통일을 주도한 분단국가의 국력 수준에 따라 상대적이다. 즉, 남한이 선진화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외교 공조를 이끄는 성숙한 통일 역량을 발휘할 경우, 통일 한국은 역내 안정 및 공동번영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시점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취약해 질 경우, 오히려 주변국들의 부정적 영향이 통일을 방해하는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능력이 결여될 경우, 통일 한국은 대외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외부의 영향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효과는 국력 수준뿐만이 아니라 통일 방식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남북한이 무력충돌을 겪고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여 통일을 달성할 경우 통일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 미·일 대 중·러의 느슨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 세력 판도가 통일시점까지 지속된다면 동북아 4국과의 관계도 신냉전 구도가 도래할 정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남북한이 합의통일을 달성할 경우, 민족 내부적으로는 통일 정부의 권력배분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동맹체제에 대한 국제적 인정 문제 등이 통일 협상의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을 줄속하게 처리하여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통일을 선포한다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주변국의 세력 경쟁을 자극하여 외세의 부정적인 개

입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통일 한국의 대내외적인 정치적 균열은 외세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통일을 이루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만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후 남북한이 정치적 불안 요인을 해소한 상태에서 완전한 합의통일을 달성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북한의 자발적인 붕괴에 의한 평화적 흡수통일도 국제법적으로는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 될 것인 바, 완전한 합의통일의 경우와 같이 대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통일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더라도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게 되면 통일 한국은 역내 경제통합 및 다자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I. 통일 ‘초기 조건’으로서의 동북아정세

1. 미·일·중·러 4국의 갈등과 협력

동북아 지역의 세력 판도는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은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호주,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도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세계 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 간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며 중앙아시아·동남아국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하였다.¹⁸ 중국과 일본은 특히 해·공군전

18_김국신 외,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참조.

력을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4국 어느 국가도 상대방에 대해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바, 동북아 지역에서 조만간 강대국 사이의 군사적 분쟁이 돌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⁹

동북아 4국은 미래 전략 구도를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미국의 국제 상거래 및 투자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고, 한국·중국·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도 계속 증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 영역에서의 갈등과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중·러 4국의 실질적인 외교 행태는 실용주의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며 실리 위주의 외교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09년 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동북아 4국 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²⁰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안보 전략보다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와 각기 외교적·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유엔과 G20 금융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세계 금융위기 극복, 핵확산 방지 및 군축, 기후변화 회의 등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¹⁹-Dennis C. Blair, "Military Power Projection in Asia," Ashley J. Tellis, Mercy Kuo and Andrew Marble eds., *Strategic Asia 2008~09: Challenges and Choices*, (Seattle: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08), pp. 391~420.

²⁰-여인곤 외,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53~60 참조.

2. 동북아 4국과 한반도 통일

미·일·중·러 4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국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핵확산 문제를 탈냉전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유지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미국·영국·프랑스와 함께 5대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유지에 국익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미·일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미·일·중·러 4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하는 데 협력하였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다.²¹ 그 후 미국은 대북 제재결의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대북제재와 병행한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 침체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북아 4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를 억제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 핵협상을 유연하게 이끌어 나가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하면 남북한은 한

²¹-1874호는 34개 조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2009)*,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6141st meeting, 12 June 2009 <www.un.org/Docs/sc/unsc_resolutions09.htm>.

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 4국은 현재 한반도 통일을 먼 장래의 일로 간주하며 남북한 평화 공존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주 통일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일·중·러 4국은 모두 통일 한국이 자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우호 국가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

IV.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협력 증진

1. 동북아 세력 변화와 통일 한국의 위상

한반도 통일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통일이 성숙된 시점에서 동북아 4국의 역학관계도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전 세계 지정학적 힘의 중심이 2020년에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 쪽으로 기울고 그 무렵엔 중국 경제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²²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이 현재 성장 추세를 지속하며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면 2020년경 동아시아 역학 구도는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패권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내 세력 판도는 경제력 차이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 각국이 국가 이익에 기초한 전략적 구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문제와 더불어 외교관계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 향후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정치 발전이 특히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확대해 나갈 경우 미·일·중 3국은 안정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할 것이다.

²²-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2004년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이 2010~2020년까지 8%를 상회하는 성장을 이룩한다는 가정하에 국력변화를 전망하였다.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Mapping the Global Future: Repor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s 2020 Project* (December 2004).

남북한이 2020년 이후까지 분단체제를 지속하고 있다면, 동북아 4국의 국력 차이와 이들의 상호관계가 통일 환경의 새로운 현실과 한계를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 외세가 개입하는 강도 및 양상은 한국의 국력과 통합된 남북한의 외교력에 상대적인 성격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취약하고 남북한이 정통성 경쟁을 지속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는 남북통일을 부추기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이용하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강대국 수준으로 강화되어 남북한의 외교공조체제를 주도하고 있을 경우, 한반도 통일은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²³

21세기 한국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여 세계적인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성숙한 세계국가로 국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2050년 경제력 순위를 중국·미국·인도·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멕시코·통일 한국·영국·터키·일본·프랑스·독일 등의 순서로 전망하고 있다.²⁴ 세계 경제력 평가에서 통일 한국의 국력이 일본·프랑스·독일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전망은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및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2. 평화통일과 동북아 경제·안보협력 증진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역내 국가 간 교역과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한·중·일 3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역내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차

²³-이호재, 『21세기 통일한국의 이상론』 (서울: 화평사, 2003), 참조.

²⁴-Goohe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September 2009)

단하여 지역협력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다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한반도는 중국횡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되는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가 된다.²⁵ 일본의 상품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수출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산물도 한반도를 경유해 일본·미국 등으로 수송될 것이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시베리아 지역 천연가스 개발, 두만강지역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합작 사업은 동북아 지역에서 정부 차원의 다자간협력체 구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시베리아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과 이를 한국·중국·일본 등에 공급하기 위한 수송망 구축 사업은 국제적인 자본·노동·기술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통합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역내 다자안보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정부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단지 민간인 전문가와 정부 관료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다자안보대화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는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5개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리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있는데 이 회의의 내용은 기본적인 신뢰구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²⁶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6자회담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정

25_성원용,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의 전략과 우선순위: 산업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121~177 참조.

26_김태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기대와 현황과 전망,”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271~296 참조.

부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로 확대·발전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의체가 상설화되어 정례적으로 개최되면 역내 국가들의 안보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차이를 조율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V. 결 론

우리 정부는 북한 핵폐기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글로벌 코리아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실용외교를 전개하고 있다.²⁷ 금년 11월 한국은 단독 의장국으로서 제5차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G20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통일을 달성하면 더 큰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 한국은 세계 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력이 신장될 통일 한국은 외교 범위를 확대하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은 통일과 더불어 완전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이 핵폐기 결단을 내리고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남한도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선진국 진입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내적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평화통일과 통일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는 총체적인 국력 증강을 바탕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 목표이다.

27-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2009.3) 참조.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김 호 섭 (중앙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김호섭입니다.

저는 주로 조민 박사님의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토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국쇠퇴론에 대한 논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민 박사님의 논문은 통일 환경과 관련하여 미국 쇠퇴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외교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미국의 쇠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외교정책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쇠퇴하거나 이미 쇠퇴했다면 한미동맹 대체론이나 자주 외교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쇠퇴하니까 미국을 중시할 필요가 없다”, 혹은 “미국이 쇠퇴하니까 다른 나라를 찾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많아질 겁니다. 따라서 한국 외교정책에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는 미국의 쇠퇴론을 주장하실 때는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미국의 세계 패권 국가 지위를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대국 부상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국이 계속 강하게 되고 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대외정책을 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Susan Shirk의 ‘China: Fragile Superpower’라는 책을 보면 ‘Strong Abroad but Fragile at Home’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아마 그 말이 현재의 중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usan Shirk는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강할지 모르나 내정이나 내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중국은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산주의체제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국 부상론을 전제한 외교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것이다’라는 인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A.F.K 오르겐스키(A. F. K. Orgenski)는 “새롭게 강대국이 된 국가가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으면 기존 강대국에 도전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제 7천억 달러를 갖고 있고, 대미무역에서 매년 2~3천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 주면 양자 간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전제한 외교정책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북한 관련 미래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체제는 한국에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가져다줍니다. 바로 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경제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선 군사적 차원의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북한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와 천안함 침몰 사태가 군사적 차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다음 경제적 차원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이 경제적 붕괴를 맞거나 아사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한편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군사적 위협과 연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인식이 존재합니다.

첫째, 경제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은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견해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하든 번영하든 한국에게는 항상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김정일체제 자체가 선군정치체제이므로 김정일체제 자체가 붕괴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발 더 나아

가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하면 할수록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더 될 것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생각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야만 한국에게는 군사적으로 덜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경제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햇볕정책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 군사적 도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적인 면을 올려줘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햇볕정책의 전제입니다. 즉 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면 군사적으로 위협이 덜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경제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그것에 따라 통일 비용, 통일 편익, 분단 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저는 통일 비용은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고, 분단 비용은 군사적 측면의 문제라고 봅니다. 통일 비용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한국이 통일 후 투입할 경제적 비용입니다. 분단 비용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개발협력은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분단 비용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할 때 그들이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번영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향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승 준 (인천대학교 교수)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를 위해 국가의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100년

전 국제정치 상황이 그랬습니다. 조선 점령에 대한 일본의 의지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은 198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1조는 ‘조선은 완전무결한 독립국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결과로 맺은 포츠머스 조약 1조에서도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야 일본이 조선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시모노세키 조약과 포츠머스 조약에는 조선 점령에 대한 일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일본의 의지로 인해 중국은 수천 년간 조선 반도에서 유지해온 영향력을 처음으로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의지는 당시 조선 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국제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킨 국가의 의지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950년 마오쩌둥은 한국전쟁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비록 유소기, 주은래 등 당시 중국 지도층들이 자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찬성하지 않았으나, 마오는 19세기 말 상실한 조선 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의지의 결과로서 중국은 현재 한반도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춘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미국과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남북 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정세를 읽는 지도자의 탁월한 판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런 판단력을 갖춘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인 해 (고려대학교 교수)

안인해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 사례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독일과 아시아권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과 아시아의 분단 경험 국가들 간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일은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습니다. 동독 공산주의는 구소련에 의해 강요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결과로 베를린 장벽이 동서독을 가로 막았습니다. 반면 아시아권 공산주의는 유럽권에 의해 강요된 공산주의라기보다 자생적인 민족주의가 바탕이 된 공산주의였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항일 운동을, 베트남은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름의 공산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둘째, 독일 분단 과정에서는 내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내전을 겪어 분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DMZ에는 엄청난 무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과 아시아권 공산주의 국가들, 독일과 아시아의 분단 경험 국가들 간에는 공산주의 발생 배경과 분단 과정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이 갖는 함의를 존중하되, 우리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가 더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독일 통일의 교훈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 및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자금 및 기술력이 완전한 보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일 방식보다는 한반도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 대 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최대석입니다.

오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통일 과정에서의 준비를 외적 요인에 더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우리가 좋은 통일, 바른 통일을 할 만한 자세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국신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 주변국들은 한반도 통일이 자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또한 통일 한국이 자국의 우호 국가로 남아 있기를 희망할 겁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이 주변국들의 우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 한국이 8,000만 인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나 일본인의 눈으로 볼 때, 북핵문제보다 독도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북핵문제보다 동북공정에 더 신경을 쓴다면 중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주변 국가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뢰 받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법 위에 국민 정서법, 국민 정서법 위에 폐법이 존재합니다. 그 폐법은 이번 천안함 사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 수병을 구조하기 위해 찬 바닷물 속에 뛰어 들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영결식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이 차가운 물속에 뛰어 들었을 때 과연 무슨 규칙에 의해서 뛰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면 규칙이 아니라 국민 정서법 또는 폐법 때문에 그 분이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가 보다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우리가 G20나 국민소득을 강조하는 것보다 한주호 준위와 같은 분들의 생명을 더 아껴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변국들의 존경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된 한국이 갖게 될 민족주의적인 성향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대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요 갈등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민족주의는 매우 공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공격적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민주화되는 과정,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공격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박 승 준 (인천대학교 교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통일 정책과 국제정치적 게임을 즐기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통일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일 정책은 5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평양이 보기에라도 일관된 통일 정책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게임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국제정치적 게임을 즐기는 분위기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통일을 달성해 가려면, 국제정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 신문 등 한국의 미디어부터 국제정치 현실에 대해 너무 어둡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 수립과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 국 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논문은 국력과 통일 환경의 상대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하여 비전의 문제와 그것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비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실 독일 통일 당시 콜 수상은 좋은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콜 수상

은 구소련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실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실각 되면 구소련이 다시 보수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의 기회를 서둘러 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한 콜 수상의 비전이 2년 이상의 전망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비전의 폭이 좁았던 독일은 통일을 이뤘고, 비전이 넓은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비전에 있지 않고 통일을 착실하게 준비했던 독일인들의 자기 통제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독인들의 착실한 통일 준비는 경제적 성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콜 수상은 고르바초프가 필요로 할 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었고,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통일 환경과 국력의 상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반면 독일은 세계를 정벌하려던 국가였습니다. 그만큼 과거 한국과 독일의 국력 차이는 컸고, 당시 한국의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상황에도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닙니다. 적어도 준 상어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정치적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과거 식인 상어처럼 달려들었던 서구 제국주의 세력은 방송통신 중계 체계의 발달로 다양한 견제 세력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으나 통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 상황은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미국, 중국 등도 유사시 한국 전쟁의 상황에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한국 전쟁은 미군 3만 명의 희생을 전제합니다. 중국도 문화혁명이나 6.25 참전으로 경제 후퇴 10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북한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 경제 10년의 후퇴를 또 다시 받아들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통일 환경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비우호적 상황은 아닙니다. 미·일·중·러 4개국 모

두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한반도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이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닌 통일을 준비하는 착실한 자세의 부재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통합된 의지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개의 분단국가 상태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도 불가능합니다. 8,000만 민족 미래를 분단국 상태로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통일, 한반도 평화, 민족 미래 문제는 남한의 책임입니다. 지금 북한을 문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한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이 되어 8,000만 국력을 가져야 통일 경제의 미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세계 경쟁력 순위를 보면 인구 대국 순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문제는 갈수록 우리 전략가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우호적 이웃으로, 적어도 동역과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대량 탈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언젠가 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제게 “한국이 통일되면 통일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실천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 ‘통일은 어떠한 형태로든 돈이 필요한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 문제는 우리의 통일 의

지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일입니다. 더불어 그것은 2,3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통일 비용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합니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베이징 컨센서스가 인류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와 러시아를 전략 동맹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 관련 양자택일 방식에 대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택일 방식은 논리적으로 명쾌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경험해온 북한문제 관련 정책실천 과정을 보면, 양자택일이 어렵습니다. 양자택일을 하면 정책이 반드시 실패합니다. 따라서 양자택일이 논리적으로 명쾌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북경협 문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남북경협은 좌든 우든 공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북한 실체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은 '북한은 나쁜 나라가 아니다. 북한도 알고 보면 좋은 이웃이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 개과천선해서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라는 전제로 추진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인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체제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개과천선할 구조와 체제가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나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은 지난 65년간의 북한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북한체제는 착한 체제가 아닙니다. 악한 체제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한다고 해도 북한체제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체제 해소와 해체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 방법은 협력의 손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경협과 남북협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남북협력과 남북경협이 갖는 목표 의식은 지난 정부와 달라야 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와는 다른 인식을 어떻게 실천적인 방법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딜레마를 겪

고 있는 겁니다.

한편 안보 문제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력도발은 경협 차원이 아닙니다. 무력도발과 같은 유사시 상황에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안보 및 국방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북한체제의 해소·해방·해체를 위해 북한으로 가야 합니다.

북한을 보는 인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정책적 실천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실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옳은 생각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라는 독 문은 떡을 계속 제시할 때, 북한은 그것이 독 문은 떡인 줄 알면서도 먹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없이 북한으로 가야 합니다. 북한에 가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의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關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區域合作的新關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외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저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저	2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공저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공저
2009-02(1)	1)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1)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저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저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저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근,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Studies Series

비매품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학술회의총서 10-02

제1회의 독일 통일 20년: 성과와 시사점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정치적 측면

Hans-Ulrich Seidt (주한독일대사)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경제·사회적 측면

Walter Klitz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토론

제2회의 한반도 통일비전

한반도 통일의 의의 및 전망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 주는 영향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www.kinu.or.kr

